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172-01

정책보고서 2017-29

사회보장제도 생활지원 기본평가



황주희 · 김동기 · 공진용 · 윤소영 · 강은나 · 김성희 · 김태은

【책임연구자】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발달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공동연구진】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진용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교수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제출문 <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사회보장제도 생활지원 기본평가」의 연구용역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1월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황주희

연구참여자: 김동기

공진용

윤소영

강은나

김성희

김태은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2
제3절 이론적 검토	82
제2장 평가방법	73
제1절 평가 개요	73
제2절 평가 방법	94
제3장 평가결과	73
제1절 자립여건 지원	55
제2절 보조기기 및 접근권 지원	26
제3절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	27
제4장 결론 및 제언	38
제1절 자립여건 지원	58
제2절 보조기기 및 접근권 지원	49
제3절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	111
참고문헌	118

표 목차

〈표 1-1〉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평가틀	9	2
〈표 1-2〉 사회보장사업 중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사업	1	3
〈표 1-3〉 사회보장사업 중 취약계층 대상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 분류: 취약계층별	2	3
〈표 1-4〉 이용자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타당성 및 효과성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	4	3
〈표 1-5〉 2015년 문화나눔 세부 사업 평가지표 체계	5	3
〈표 1-6〉 문화소외(취약)계층 문화(복지)사업의 분석 요소	6	3
〈표 2-1〉 사회보장사업 사업군 구분	1	4
〈표 2-2〉 평가 대상 사업군	2	4
〈표 2-3〉 세부 사업군 분류	2	4
〈표 2-4〉 세부 사업군 및 세부 사업 구분	3	4
〈표 2-5〉 자립여건지원사업군 예산 규모	6	4
〈표 2-6〉 2016년 장애인 분야 단위사업별 예산(추경 반영)	7	4
〈표 2-7〉 평가단 운영 현황	0	5
〈표 2-8〉 평가틀	1	5
〈표 3-1〉 자립여건지원사업군 세부 내용 개요	5	5
〈표 3-2〉 자립여건지원사업군 연도별 사업 예산 현황	8	5
〈표 3-3〉 자립여건지원사업군 성과지표 및 달성률	1	6
〈표 3-4〉 보조기기 및 접근권 지원 사업군 세부 내용 개요	2	6
〈표 3-5〉 보조기지원사업 연도별 사업 예산 현황	6	6
〈표 3-6〉 접근권지원사업 연도별 사업 예산 현황	7	6
〈표 3-7〉 보조기기 및 접근권 지원 사업군 지원 건수	8	6
〈표 3-8〉 접근권지원사업 성과지표 및 달성률	1	7
〈표 3-9〉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 분야 세부 내용 개요	3	7
〈표 3-10〉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 분야 연도별 사업 예산 현황	7	7
〈표 3-11〉 노인전문자원봉사지원사업의 수행 기관 및 참여 노인 대비 사업비 현황	8	7

그림 목차

[그림 1-1]	사회보장사업 사업군 구분	1	2
[그림 1-2]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의 관점	3	2
[그림 1-3]	문화복지정책으로서 문화여가생활지원	4	2
[그림 1-4]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 방법 개요	7	2
[그림 2-1]	사회보장제도 생활지원 분야 평가 기본 방향	10	4
[그림 2-2]	생활지원군 평가단 구성	9	4
[그림 3-1]	지역별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 및 보급률	7	6
[그림 3-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역별 이용액 현황	9	7
[그림 4-1]	평가 모니터링 추진 방향	4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각 개인이 직면한 다양한 삶의 문제 및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임.
- 그러나 다양화되는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제도의 설계는 사회보장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실정임.
 - 또한 다양한 제도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낮은 복지 체감도 현상이 병존하고 있음.
- 이에 정책적 특수성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2013. 1.)되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정책의 사업들을 생애주기별·기능별 기준에 따라 ① 교육, ② 돌봄, ③ 의료지원, ④ 고용, ⑤ 주거, ⑥ 생활지원, ⑦ 생계사업군으로 구분하고, 2016년부터 사업군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개별 사업 단위 평가에서 나아가 보다 상위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분절적으로 개별 부처에서 탄생시킨 각 제도의 목적과 운영, 그리고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기능별 기준에 따라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사회보장제도 기본평가의 취지를 바탕으로 생활지원 분야 평가는 세부 사업 및 사업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나.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생활지원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당 제도의 발전 및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해 생활지원 분야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군의 주요 성과 또는 이를 저해하는 문제 요인을 파악하고,

–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지원 분야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개인의 다양한 문제 및 욕구에 대응하는 폭넓은 사회보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지원 분야의 평가를 위해 설계, 재원 투입, 집행, 성과 등에 대한 평가틀을 개발하고,

– 이를 근거로 한 평가를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생활지원과 문화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여가생활지원 분야의 전체론적 관점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생활지원 분야에 속한 개별 사업들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한 계기에 시작된 제도들로, 소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적은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산적이고 개별적인 사업들임.

– 거시적인 큰 틀에서 각각의 기능에 따른 관련 제도들을 평가하는 것은 새로운 관점의 평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 모색과 같은 전체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새로운 만큼 선행된 평가가 없고, 생활지원사업 내에 세부 사업군으로 묶어 통합적 평가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세부 사업군의 평가에서는 개별 사업의 본질적인 사업 특성들을 뛰어넘는 통합적 평가를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의 기본 방향 및 평가 방법

가. 기본 방향

□ 생활지원 분야 현황 분석 및 성과평가

○ 생활지원 분야 및 세부 사업군 평가를 위한 평가틀 개발.

- 사회보장사업 공통 평가틀(강신욱 등, 2015)을 바탕으로 생활지원 분야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한 평가틀 마련.
- 이를 위해 평가단을 활용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 개별 사업 평가를 토대로 세부 사업군 평가: 현황 분석 및 한계 진단.

- 생활지원 분야의 평가는 생활지원사업군 사업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세부 사업군’으로 묶고, 이를 통칭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개별 사업들을 세부 사업군 수준으로 재분류하였음.
- 이후 세부 사업군 명칭에 해당되는 다른 개별 사업들을 추가·삭제하여 평가대상을 명확히 설정.
- 평가의 방향은 세부 사업군에 해당되는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세부 사업군 수준으로 평가의 범위를 넓혀 통합적이고 전체론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사업들을 평가함.
- 따라서 평가의 주요 수준은 ‘세부 사업군 수준’으로 설정.

[그림 1] 사회보장제도 생활지원 분야 평가 기본 방향

	STEP 1: 세부사업 평가	STEP 2: 세부 사업군 평가	STEP 3: 사업군 평가
평가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개별 사업 	개별 사업을 포괄하는 세부 사업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생활지원 사업군: 자립여건지원, 보조기기 및 접근권 지원 • 문화여가생활지원 사업군: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생활지원 사업군 • 문화여가생활지원 사업군
평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사업 평가 • 성과 및 한계 • 개선방안 제시 	각 사업별 특수성, 이질성 및 상위 개념의 포괄성을 고려하여 세부 사업군 단위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군 단위 평가한계

나. 평가 범위

□ 평가 대상 사업군

○ 기존 생활지원에 분류¹⁾되어 있는 사업 중 본 평가의 취지를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평가 대상 사업군을 선정하였음.

- 기존의 생활지원 분야 분류에서 그 대상과 규모, 사업의 성격 면에서 평가를 위한 공통 기준 및 사업 목적의 동일성을 찾기가 어렵고,
- 또한 사업의 내용과 성격이 분절적이고 협소하여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고유 목적인 전체론적 틀을 가지고 거시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에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음.

〈표 1〉 평가 대상 사업군

구분	사업군	비고
평가 대상 사업군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생활지원사업 (3) 문화여가 생활지원사업	- 세부 사업군 설정
제외	(2) 가족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지원사업 (4) 재해 및 기타피해보호사업	- 대상이나 사업의 규모 면에서 너무 지엽적이라 사회보장사업 평가의 내용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

□ 세부 사업군 설정

- 기존의 사업군 구분에서 해당 사업군이 관련된 사업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사업군 명칭을 수정하고 특성에 따른 세부 사업군을 추가 설정함.
-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군으로 분류된 개별 사업들은 중증장애인, 여성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사업들로 매우 지엽적이거나, 이들 사업의 평가 결과를 전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장애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오해의 여지가 있음.

1) 강신욱 등(2015)에서는 생활지원 분야를 ① 장애인 대상 자립생활지원사업 ② 가족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지원사업 ③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 ④ 재해 및 기타피해보호사업군으로 구성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사업군을 ‘장애인자립여건지원’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특성별로 세부 사업군을 설정함.
- 장애인복지정책 대상 중에서도 장애인복지정책의 주된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한 이들(중증장애인이나, 여성 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음.

〈표 2〉 사업군 명칭 수정 및 세부 사업군 분류

사업군	세부 사업군
(1) 자립생활지원사업	㉠ 자립여건지원 ㉡ 보조기기 및 접근권지원
(3)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	㉢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

□ 평가 대상 사업 선정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생활지원사업과 문화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 사업군 내 세부 사업군 구분을 토대로 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개별 사업을 선정.
- 세부 사업군의 구분 및 명칭은 세부 사업군 내 개별 사업들의 성격을 포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
 - 개별 사업들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존 세부 사업군 분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의 의의가 크지 않은 개별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부 사업군의 하위 사업으로 재배치.
 - 기존 사회보장 세부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업군 평가(명칭 고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추가로 평가.
- 사회보장사업 기본평가의 취지와 의의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개별 사업 선정 시 지방이양사업 및 지자체 사업, 일회성 사업 등은 제외.
- 본 연구에서의 세부 사업군 구분 및 평가 대상 개별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 세부 사업군 및 세부 사업 구분

세부 사업군	세부 사업		대상	주요 내용	담당 부처
① 자립여건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추가)		1~3급 등록 장애인 중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	•활동보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보건 복지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62곳)를 통해 권익 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및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보건 복지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성인 여성 장애인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22곳)를 통해 상담, 정보 제공 및 여성 장애인 아웃리치, 역량 강화 교육,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사후 관리 및 자조모임 등 여성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사회참여 지원서비스 제공	보건 복지부
	중앙발달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추가)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지역 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권익옹호사업 등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지원서비스 제공	보건 복지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비용지원 및 성년후견선임비용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및 후견인	•후견심판 청구에 소요되는 각종비용(1인당 최대 50만 원) 및 후견인 활동실비지원(1인당 10만 원)	보건 복지부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개별·집단 상담 제공	보건 복지부
② 보조기기 및 접근권 지원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장애인에게 지원 기준액 이내 품목 무료로 교부	보건 복지부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사업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추가)	•품목별 지원 기준액 이내 보장구 구입비 90% 지원	보건 복지부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	•품목별 지원 기준액 이내 보장구 구입비 100%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 고용 사업주 및 근로장애인	•작업용 보조공학기기지원, 개발 및 보조공학기기 인식 개선을 위한 보조공학 박람회 등	고용 노동부
		보조기기센터 사례관리사업	장애인 전체(추가)	•보조기기서비스 사례관리 및 품질 관리	보건 복지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장애인 전체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보급, 보조기기개발지원, 임대 보급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접근권 지원	교통약자이동편의 지원사업	교통약자, 장애인	•저상버스 보급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보급	국토 교통부
		장애인운전교육장 입차 및 순회교육사업	1~4급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 (특수차량+운전전문강사지원)	보건 복지부

세부 사업군	세부 사업	대상	주요 내용	담당 부처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지원사업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으로 훈련하여 분양	보건 복지부
	방송소외 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시각, 청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에게 장애인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방송 수신기 보급(저소득층 우선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사업	청각, 언어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레터링서비스 제공 및 대국민 홍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③ 취약계층 문화여가 생활지원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작은도서관조성지원사업)	문화소외계층	•문화소외지역의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 제공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취약지역	•작은도서관조성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어르신문화프로그램	60세 이상 어르신	•전국 문화시설에서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 관광부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60세 이상 노인 및 전문 퇴직자	•노인자원봉사단(클럽) 조직 및 관련 행사 개최 등 사업 지원	보건 복지부
	문화 격차 해소(통합문화이용권사업)	경제적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체육 관광부
	유·청소년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취약계층 유청소년 (만 5~18세)	•소외계층 유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의 참여 기회 제공 •대상자 1인당 매월 1회 최대 7만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장애인 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	장애인, 비장애인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향수프로그램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 평가 기간

- 평가 기간은 평가 근거 자료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으로 함.

□ 평가틀

- 평가지표는 기존 사회보장 기본평가 공통지표를 활용하되 사업 특성과 자료 활용 범위를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설계-투입/집행-산출-성과-영향’의 큰 틀에서 생활지원 분야 현황 분석 및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구성,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 평가틀을 적용함.

- (설계)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대상자의 표적화 정도, 사업 간 관계, 모니터링의 체계성 등 검토
- (투입) 자원 투입의 충분성, 사업 예산의 적절성, 지역적·시기적 자원 투입의 적절성 등 검토
- (산출)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 사업 만족도, 사업의 효율성 등 검토
- (성과) 성과 달성 여부, 평가의 환류 등 검토

○ 평가지표의 모집단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표 4〉 평가틀

단계	평가지표	주요 내용	평가 구분		평가 기준	판단 근거
설계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본 사업이 필요한 대상자를 얼마나 포괄하는가?	혼합	정량	대상자 포괄성	이용자 수/대상 자수*100
				정성	대상자 포괄의 충분성(종합)	사업 대상 설정 전반
	대상자의 표적화 정도	지원 대상자가 욕구가 강한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가?	혼합	정량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내용 구성에서의 욕구 수준 반영 여부	욕구 수준별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수준 결정 체계 존재 여부(있다/없다)
				정성	표적화 적절성(종합)	대상자 표적화 전반
	사업 간 관계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정성	정성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업 대상, 급여/지원 내용
				정성	사각지대 존재 여부	사업 대상, 급여/지원 내용
	모니터링의 체계성	모니터링을 통해 여건,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했는가?	혼합	정량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여부
				정성	모니터링 체계성(종합)	모니터링 체계 전반 (구성 및 운영 현황 포함)
투입	자원 투입의 충분성	지원 대상의 규모를 고려한 예산 및 인적자원 투입이 충분한가?	혼합	정량	단위 인구당 투입 사업 예산	이용자 1인당 투입예산=사업예산/이용자 수
				정량	단위 인구당 투입 인적자원	이용자 1인당 투입 인적자원=투입 인적자원/이용자 수
				정성	자원 투입 충분성(종합)	자원 투입 충분성 전반

단계	평가지표	주요 내용	평가 구분		평가 기준	판단 근거
	사업 예산의 적절성	총예산 대비 실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절한가?	혼합	정량	실제 사업비 비중	실제 사업비 비중=경상비 제외 사업비/총사업비*100
				정성	사업 예산의 적절성(종합)	사업 예산의 적절성 전반(연차별 예산 반영의 노력 정도 포함)
	지역적, 시기적 자원 투입의 적절성	자원 투입(사업의 집행, 급여의 제공)이 지역적,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정성	정성	지역적 자원 투입 적정성(종합)	지역적 자원 투입 적정성 전반
				정성	시기적 자원 투입 적정성(종합)	시기적 자원 투입 적정성 전반
산출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	서비스 수요 대비 수급률은 적절한가?	혼합	정량	신청률	신청률=신청자 수/대상자 수*100
				정량	인정률	인정률=인정자 수/신청자 수*100
				정량	수급률	수급률=수급자 수/인정자 수*100
				정성	수급의 적정성(종합)	수급의 적정성 전반
	사업 만족도	사업의 이용자들이 만족하였는가?	혼합	정량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존재 여부(있다/없다)
				정량	이용자 만족도 결과 반영 여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반영하거나 수정한 실적 여부(있다/없다)
				정성	이용자 만족도 반영의 적정성(종합)	이용자 만족도 반영의 적정성 전반
	사업의 효율성	사업 수행 시 기관 간 연계 협력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였는가?	혼합	정량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실적 여부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및 개발을 위한 협력 실적 여부(있다/없다)
				정성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효율성(종합)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과의 연계나 협력 실적 효율성 및 자원 활용성 전반
성과	성과 달성 여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혼합	정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성과 목표 설정 근거의 객관성 및 합리성
				정량	목표 달성률	달성률=달성/목표*100
				정성	성과 달성 수준(종합)	성과 달성 수준 전반
	평가의 환류	사업 과정 및 성과에서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를 환류(반영)하였는가?	정성	정성	사업 환류의 적정성 및 체계성	전년도 사업 성과 및 평가 결과의 환류 적정성 및 체계성
				정성	성과 개선 노력의 적절성	성과 개선 노력의 적절성 및 타당성

3. 평가 결과

가. 자립여건 지원

1) 사업군 개요

□ 사업군 목표

- 중증·발달장애인 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여건 구축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주요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등 총 6개 사업, 5300억 원 규모로 사업별 개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5〉 자립여건지원사업군 세부 내용 개요

사업명	대상	내용	'16 예산 (단위:백만원)	소관 부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3급 등록 장애 인 중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	•활동보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522,070	보건 복지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62곳)를 통해 권익옹호, 동료 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및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3,717	보건 복지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성인 여성 장애인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22곳)를 통해 상담, 정보 제공 및 여성 장애인 아웃리치, 역량 강 화 교육,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사후 관리 및 자조모임 등 여성 장애인의 권익옹 호·사회참여지원서비스 제공	1,187	보건 복지부
중양발달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동 및 발달 장애인	•지역 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정보 제공, 발 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 권익옹호사업 등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지원서비스 제공	700	보건 복지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 판비용지원 및 성년후 견선임비용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및 후 견인	•후견심판 청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1인당 최대 50만 원) 및 후견인 활동실비지원(1인 당 10만 원)	1,501	보건 복지부
발달장애인부모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개별/집단 상담 제공	900	보건 복지부

2) 주요 결과

□ 설계

- 자립여건지원군사업은 활동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 동 사업은 2015년부터 신청 자격을 점차 확대하여 대상자 포괄성을 높임.
 - * 신청 자격: (2014년) 장애 1, 2급 → (2015년 6월) 장애 3급까지 확대
- 다만, 장애중증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4급 이하 장애인은 서비스 욕구가 있더라도 대상자 선정 시 제외.
 - * 향후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2019년 예정) 자격 기준 완화 검토 필요.

□ 투입·집행

- 총사업군 예산은 증가 추세이나 수혜자 지원 확대와 함께 서비스 단가 상승, 지원센터 개수 증가 등의 요인도 큰 것으로 평가.
 -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방문간호, 30분 미만): ('15)31,760원→('16)32,630원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율: ('14)56개→('15)61개→('16)62개
-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및 발달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상담지원은 집행 실적이 점차 감소.
 - * '18년 1월부터 소득기준(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을 폐지하여 지원 강화

□ 산출

- 발달장애인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군 내 예산은 소폭 증가한 상황으로 대상자 증가 규모 등 서비스 수요를 고려한 예산 검토 필요.
 - * 발달장애인 인구 추이: ('11) 18만 명 → ('16) 22만 명
- 장애인 활동지원 등 급여 이용률 및 서비스 만족도 정체 상태
 - 일부 장애인(최중증 와상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관의 배제, 이용 시간(심야, 공휴일 등)에 따른 인력 수급 어려움 등으로 추정.
 - *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률(%): ('14)82.0 → ('15)84.4 → ('16)84.0
 - ** 장애인 활동지원 만족도(%): ('14)83.7 → ('15)81.5 → ('16)79.1

□ 성과

-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의 경우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 포괄성을 강화.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부재.
 - *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설정하거나 산출 중심의 성과지표를 제시.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양적·질적 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마련 필요.
 - * (예시) 장애인 자립 수준 향상 정도,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완화로 인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정도 등.

나. 보조기기 및 접근권 지원

1) 사업군 개요

□ 사업군 목표

-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고용 안정, 정보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보조기기 지급, 방송·통신 접근권 및 이동권지원.

□ 주요 사업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보장구급여지원, 교통약자이동지원,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 총 10개 사업, 2,397억 원 규모로 사업별 개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6〉 보조기기 및 접근권 지원 사업군 세부 내용 개요

사업명	대상	내용	'16년 예산 (단위: 백만 원)	소관 부처
장애인보조기기교부 사업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 기준액 이내 품 목 무료로 교부	1,375	보건 복지부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사업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품목별 지원 기준액 이내 보장구 구입비 90% 지원	110,077	보건 복지부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	•품목별 지원 기준액 이내 보장구 구입비 100% 지원	27,869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 고용 사업 주 및 근로장애인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개발 및 보조 공학기기 인식 개선을 위한 보조공학 박 람회 등	7,200	고용 노동부
보조기기센터사례관 리사업	장애인 전체	•보조기기서비스 사례관리 및 품질관리	1,470	보건 복지부
정보통신보조기기보 급사업	장애인 전체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S/W 보급, 보조기기 개발 지원, 임대 보급	1,29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교통약자이동편의지 원사업	교통약자, 장애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저상버스로 보급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 별교통수단 보급	40,350	국토 교통부
장애인운전교육장 입 차 및 순회교육사업	1~4급 지체, 뇌 병변, 청각장애인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특수차량+ 운전전문강사지원)	616	보건 복지부
장애인보조견전문훈 련기관지원사업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보조견으로 훈련하여 분양	95	보건 복지부
방송소외계층방송접 근권보장사업	시각, 청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에게 장애인 방송을 편리하 게 시청취할 수 있는 방송수신기 보급(저 소득층 우선 보급)	2,858	방송통신 위원회
소외계층통신접근권 보장사업	청각, 언어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레터링서비스 제공 및 대국민 홍보	1,48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 주요 결과

□ 설계

○ 유사 목적의 장애인 보조기기지원사업을 부처별로 운영함에 따라 수혜자의 서
비스 접근 한계 및 사례관리 미흡 등 문제 발생.

- *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복지부),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건보공단),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고용부),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과기부)

○ 장애인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필요.

*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사업에서는 시·청각 장애인(8두)보다 지체/경증장애인(20두)에게 더 많은 보조견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투입

○ 총사업군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사업의 예산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함.

* 2016년 사업군 총예산(1,947억 원) 중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의 비중은 약 70.8%이며,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사업의 비중은 20.7% 수준임.

○ 교통약자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16년 기준, 각 37.7%(시내버스 보급 대비)와 103.3% 수준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교통약자 차량 도입을 위한 매칭예산 확보 부족 등으로 서비스 수급에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

□ 산출

○ 장애인 보조기기(보장구) 수급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협소한 지원 품목, 낮은 기준 금액 등 충분성은 낮은 수준.

– 장애 유형별 품목 확대 및 보조기구(보장구) 구입·유지비를 고려한 적정 기준 금액 마련 필요.

* 보조기기 교부(지체, 뇌병변 등 5개 유형), 보장구지원(시·청각, 언어 등 15개 유형) 등.

** 보조기구 미구입 이유: '경제적 비용부담' 68.1%(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현행 법정보급기준(장애 1, 2등급 200명당 1대)은 증가하는 장애인의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에 미흡.

* 서비스 신청 시 차량 부족 등으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거절 비율은 약 40%에 달함.

** 향후 장애등급제 개편, 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해 적정 보급 대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과

- 사업군 전반적으로 급여 기준 및 대상자 범위 확대 등 제도적 변화를 통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 단순 지급 건수 및 지급액 증가만으로 성과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다.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

1) 사업군 개요

□ 사업군 목표

- 문화향유 및 여가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양극화 개선 및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 주요 사업

-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어르신문화프로그램,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화이용권 등 총 6개 사업, 1,640억 원 규모로 사업별 개요는 아래 표와 같음.
 - 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사회적·지리적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대상·지역별 맞춤형 문화 복지 프로그램 확대·운영.

〈표 7〉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군 세부 내용 개요

사업명		대상	내용	'16년 예산 (단위: 백만 원)	소관 부처
문화 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문화 소외계층	•문화소외지역의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 제공	20,000	문화체육 관광부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문화 취약지역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지원	35,045	문화체육 관광부
어르신문화프로그램		60세 이상 어르신	•전국 문화시설에서 고령층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	4,677	문화체육 관광부

사업명		대상	내용	'16년 예산 (단위: 백만 원)	소관 부처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대한노인회	60세 이상 노인 및 전문 퇴직자	•대한노인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 회 등에서 노인자원봉사단(클럽) 조 직 및 관련 행사 개최 등 사업 지원	4,299 (대한노인회)	보건 복지부
	한국노인종합 복지관협회			606 (한국노인종합 복지관협회)	
문화 격차 해소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발급	78,520	문화체육 관광부
유·청소년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취약계층 유청소년 (만 5~18세)	•소외계층 유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의 참여 기회 제공 •대상자 1인당 매월 1회 최대 7만 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8,678	문화체육 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장애인, 비장애인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향수 프로그램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 교류 및 국제교 류지원	2,250	문화체육 관광부

2) 주요 결과

□ 설계

- 문화여가 참여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 및 벽·오지, 다문화가
정 등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의 포괄성이 높음.
- － 문화향유 및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공연, 관광, 스포츠 등 분야별
문화복지정책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투입

- 지원 대상 범위 확대,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문화적 접근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 수도권 중심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지방 문화소외현상 지속.
- *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등) 설치율: 서울 ('12)230개→
('16)356개, 충북 ('12)105개→('16)126개로 증가하여 각각 연평균 11.5%
와 4.7%의 증가율을 보임.
- 취약계층의 문화여가생활 참여율(이용률)에서도 지역 간 편차가 있음.

- 지역별 기존 인프라 격차에 따라 참여율(이용률)에 차이가 발생함.

□ 산출

○ 사업군 대상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문화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률은 사업별로 상이하여 제고 필요.

- 저소득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수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14) 44.0 → ('15) 76.0 → ('16) 61.0

**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14) 55.7 → ('15) 56.9 → ('16) 71.9

- 사회적·지리적 취약계층 대상 사업 공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농산어촌 문화순회사업('16): 신청(254건) 대비 선정(36건) 비율은 7.1% 수준.

** 문화 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16) 신청(82건) 대비 선정(2건) 비율은 2.3% 수준.

○ 이는 취약계층의 문화여가사업이 경제적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성과

○ 문화취약계층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문화 수요 충족 및 문화접근성 제고에 기여.

- 다만, 지역별·소득수준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대도시 ('14) 75.3 → ('16) 71.2,
중소도시 ('14) 73.0 → ('16) 81.0, 읍면지역 ('14) 57.7 → ('16) 65.7

** 저소득가구(월 소득 100만 원 미만) 문화예술 관람률(%): ('14)26.6 → ('16)30.9

4.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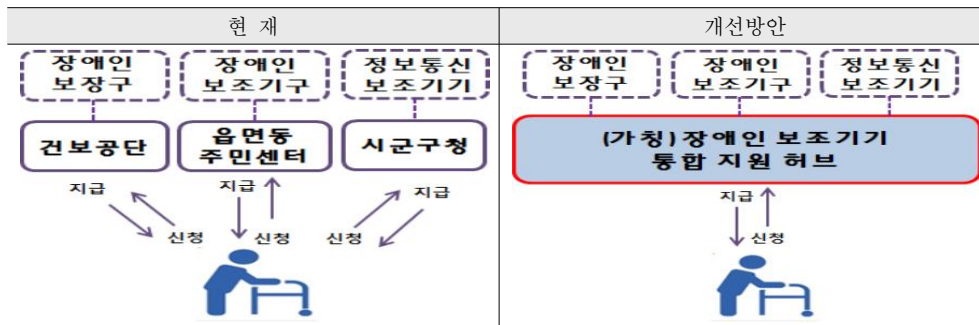
□ 장애인 보조기기 및 접근권 종합지원 계획 수립 필요.

○ 여러 부처기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여 사업 간 유기적 정합성 및 시너지 효과는 미흡.

○ 이용자 편의, 사후 관리 제고 등을 위한 지원사업 허브화 등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통합 전달체계 구축 필요.

* (예시) ① 고가 고기능 품목에 대해 보조공학사 등 전문가 심층평가를 통해 제공 ② 지역보조기기센터 등을 통한 신청, 지급 등 절차 간소화 및 전문성 강화

[그림 4] 장애인 보조기기 통합 지원



□ 대상자별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내실화

- 중증·발달·여성 장애인 및 장애아동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내실화 및 질 제고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여건 지원.

○ 수요자 욕구와 여가 환경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현행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 설계 및 서비스 제공에서 대상별 수요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 (예시)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경우 도서, 음반 구입, 영화, 태권도 강좌 등 일부 항목 편중 → 문화 소비 다양화 방안 마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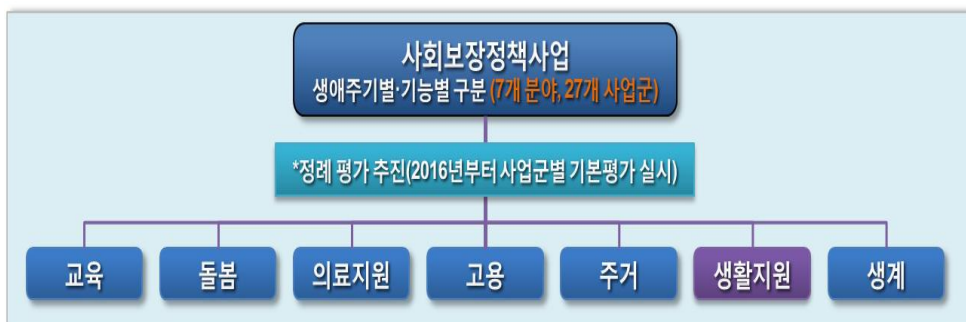
제3절 이론적 검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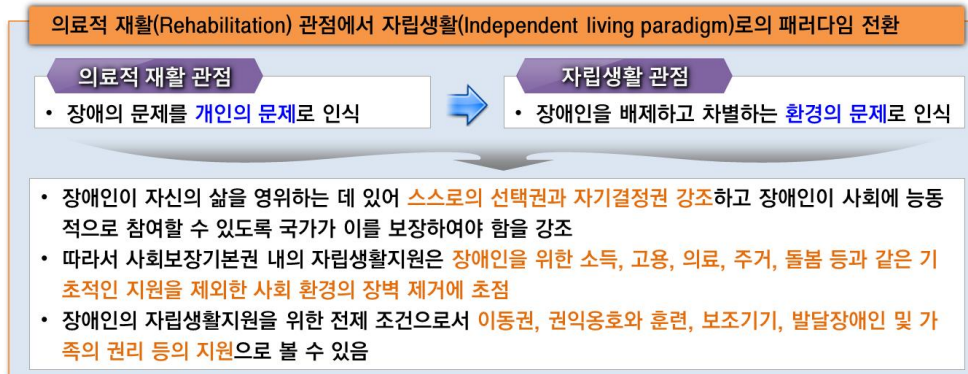
- 정책적 특수성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각 개인이 직면한 다양한 삶의 문제 및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임.
 - 그러나 다양화되는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제도의 설계는 사회보장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실정. 또한 다양한 제도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낮은 복지 체감도 현상이 병존하고 있음.
- 이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2013. 1.)되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국가 사회보장사업을 생애주기별·기능별 기준에 따라 (1) 교육, (2) 돌봄, (3) 의료지원, (4) 고용, (5) 주거, (6) 생활지원, (7) 생계 사업군으로 구분하고, 2016년부터 사업군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림 1-1] 사회보장사업 사업군 구분



-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나아가 보다 상위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본질적으로 개별 부처에서 탄생시킨 각 제도의 목적과 운영, 그리고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기능별 기준에 따라 전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사회보장제도 기본평가의 취지를 바탕으로 생활지원 분야 평가는 세부 사업 및 사업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 생계지원 사업군의 사업은 크게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생활지원사업과 (2)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으로 구성됨.
-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통합을 방해하는 환경적 요인의 제거를 강조하는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함.
 - 즉,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의료적 ‘재활(Rehabilitation paradigm)’의 관점이 아니라 이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환경의 문제를 제거하는 관점으로 바라봄.
 - 이에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보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전제 조건은 활동지원과 같은 돌봄, 이동권, 권익옹호와 보장구 등의 지원으로 장애인을 위한 소득, 고용, 의료, 주거 등을 제외한 사회 환경의 장벽 제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자 하였음.

[그림 1-2]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의 관점



- 장애인의 자립생활군으로 묶인 사업들은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여성 장애인과 같이 장애인복지사업들 중에서도 주목받지 못한 이중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사회보장 내용들로 구성됨.
- 또한 개별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들과 장애인의 접근권 관련 사업들이 있음.
- 이에 자립생활군의 사업들은 사회적 장벽 제거라고 하는 전체론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였음.

□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들은 문화적 기본권으로서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상대적 박탈감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보장정책의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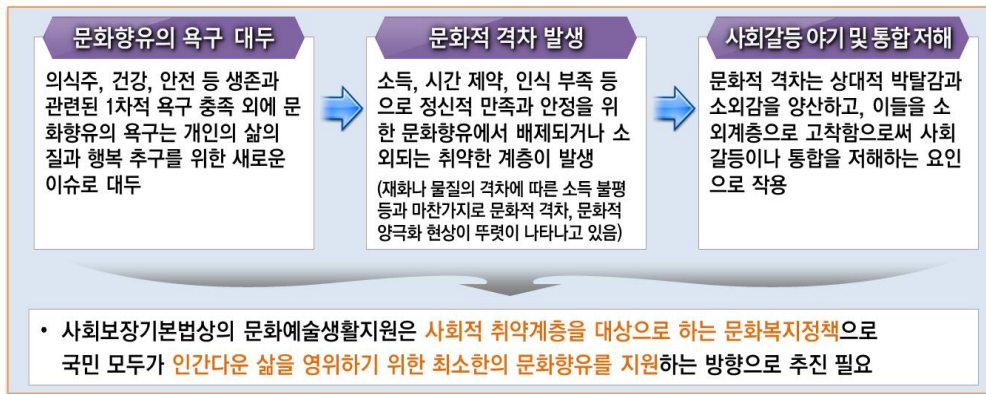
○ 의식주, 건강, 안전 등 생존과 관련된 1차적 욕구 충족 외에 문화향유의 욕구는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 추구를 위한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정신적 만족과 안정을 위한 문화향유는 소득, 시간의 제약,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구성원들로부터 배제되거나 소외되고 있음.

* 재화나 물질의 격차에 따른 소득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격차(cultural divide), 문화적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문화적 격차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양산해 이들을 소외계층으로 고착함으로써 사회갈등이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는 기본권으로서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상대적 박탈감의 예방으로 이해되어야 함.
- 이에 사회보장기본법상의 ‘문화예술생활지원’은 문화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정책으로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림 1-3] 문화복지정책으로서 문화여가생활지원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생활지원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당 제도의 발전 및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생활지원 분야는 개인의 다양한 문제 및 욕구에 대응하는 폭넓은 사회보장사업으로서 설계, 재원 투입, 집행, 성과 등에 대한 평가들을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한 평가를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생활지원²⁾과 문화적 취약계

2) ‘자립생활지원사업군’은 ‘자립여건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2장에서 제시하였음.

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여가생활지원 분야의 전체론적 관점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생활지원 분야에 속한 개별 사업들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한 계기에 시작된 제도들로 소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적은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산적이고 개별적 사업들임.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의 평가는 현재 개별 사업 평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라고 하는 거시적인 큰 틀에서 각각의 기능에 따른 관련 제도들을 평가하는 것은 새로운 관점의 평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 모색과 같은 전체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음.
 - 이러한 접근은 기존 개별적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방식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기능별로 묶인 개별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거시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체계로서 매우 의의 있다 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새로운 만큼 선행된 평가가 없고, 생활지원사업 내에 세부 사업군(① 자립여건지원사업, ② 보조기기 및 접근권지원, ③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으로 묶어 통합적 평가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세부 사업군의 평가에 있어서는 개별 사업의 분절적인 사업 특성들을 뛰어넘는 통합적 평가를 이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대상 사업은 2장의 평가 방법에 수록하였으며, 평가 결과와 결론 및 제언은 각각 3장과 4장에 상세히 정리하였음.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평가 대상 생활지원 세부 사업군 분류

- 자립생활지원분야는 전반적인 사업 검토를 통해 자립생활지원과 관련된 세부 사업들을 자립생활패러다임의 구분에 맞도록 분류
- 문화여가생활지원분야는 문화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여가정책의 관점에서 분류

□ 생활지원 분야 현황 분석 및 성과평가

- 생활지원 분야 평가를 위한 공통의 평가틀 개발.
 - 생활지원 분야 및 각 세부 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틀(평가지표 구성,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 개발.
 - 생활지원 분야 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분야별 예산 규모, 분야별 사업의 예산 규모, 수혜 대상 인원, 실적 등 전체적인 사업 현황 분석.
 - 정책목표 달성 관련 문제점 진단.
 - 공통 지표에 따라 사업 단계별 성과 중심의 평가 진행.
-
- #### □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자립생활 및 문화여가생활 지원사업 관련 주요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취약계층 대상 문화여가생활지원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생활지원 분야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
 - 지원 방식의 적절성, 사업 규모, 정책의 효과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점검하여 주요 개선 방안 제안.
 - 생활지원 분야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향 제시.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생활지원 분야 관련 선행연구 수집·분석을 통해 정책 현황 및 주요 쟁점 검토.
- 기존의 평가보고서, 관련 연구 결과, 주요 실태조사 결과 및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생활지원 분야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개발 및 결과에 대한 분석.

□ 부처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 행정자료 수집을 위한 전문가 및 관련 정책 담당자 간담회.
- 생활지원 평가를 통한 향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와의 간담회.

□ 생활지원 분야 평가를 위한 평가단 설치·운영

- 생활지원 분야 및 세부 사업 평가를 위한 관련 학계 전문가, 장애계, 부처 공무원 등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단 회의를 통한 세부 사업 및 종합적인 실태와 문제점,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그림 1-4]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 방법 개요



제3절 이론적 검토

1. 관련 연구 동향

가. 장애인정책의 평가 관련 연구 검토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1996년부터 수립되어 5년마다 실시되었으며, 2017년 제5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음.

○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괄

- 제3차 종합계획의 중간평가들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향후 제4차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평가 대상

- 제3차 종합계획의 장애인복지, 교육·문화,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 참여 4개 분야 총 58개 과제를 대상으로 분야별 추진 성과 평가를 실시함.

－ 평가 근거 자료

- 연구진이 마련한 평가들에 따른 부처별 세부 추진 과제별 추진 실적 자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연도별 추진 실적 점검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 근거 자료로 활용함.

－ 평가단 구성

-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부처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평가틀

- 5개년 중간평가와 동일한 평가틀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여 계획의 적절성, 추진 과정의 효율성, 성과 달성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기술.

〈표 1-1〉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평가틀

부문	소부문	분석 요소
계획의 적절성	1. 사업 필요성(배경) 및 사업 목적	- 사업 추진 동기 및 필요성 - 사업 목적의 명확성
	2. 사업 내용	- 사업 추진 동기와의 적합성 - 사업 내용의 명확성·타당성
	3. 성과지표(세부 계획 및 성과목표) 적절성	- 세부 계획 및 성과목표의 적절성 - 성과목표치 검증 방법의 적절성
추진 과정의 효율성	4. 추진 일정 준수성	- 연도별 추진 일정 계획상의 일정 준수성
	5. 예산 집행의 효율성	- 예산 확보 달성 정도 - 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자원)의 효율적 집행 정도
	6.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의 대응성	- 행정 여건(장애계) 및 상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여부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장애계) 여건·상황 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 사업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노력 여부 - 시행 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추진 과정상 의견 수렴 방법 및 내용 등(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등) - 국민/이해당사자(장애 당사자)에 대한 홍보 -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지 여부 등
성과 달성도	7.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일치성	- 사업 목적 달성 여부(목표치)
	8. 달성률	- 사업 목적 및 목표의 달성 수준 - 연도별 추진 계획 대비 달성률
	9. 목표 산출 근거의 적절성	- 목표 산출 근거의 객관성과 합리성

자료: 김성희 등. (2011). p.37 재인용: 김성희 등. (2012). p.50.

□ 제3차 종합계획의 평가 결과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화 지원(복지서비스 분야 4-3)

- 장애인보조기구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지원은 우수하나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 사업의 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임상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음.

○ 성년후견서비스 도입(복지서비스 분야 1-11)

- 성년후견인 서비스³⁾에 대한 수요 부응 및 성년임에도 스스로 법률행위를

3) 성년후견인 서비스는 장애인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판단 능력 결손에 따른 재산관리나 신상관리 등을 제공함.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인권과 생활보호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성과목표의 제시를 제안하였음.

○ 여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장애인 사회참여 분야 4-12)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여성 장애인의 고유한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여성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하였음.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장애인 사회참여 분야 4-7)

- 금융거래, 비밀대화 등 특수한 통신중계서비스에 대해 분쟁 발생 우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개발지원 및 보급(장애인 사회참여 분야 4-12)

-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제고를 위한 전반적 성과는 우수하였고, 사업을 통한 제품 상용화율이 타 정부 개발 과제에 비해 상당히 높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음.

○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등) 방송접근권 보장(장애인 문화·체육 분야 2-16)

- 추진 과정의 효율성 및 성과 달성도 전반에서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

○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장애인 문화·체육 분야 2-12)

- 추진 과정에서 추진 일정, 자원 및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고,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일치성과 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표 산출 근거의 적절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 증진(장애인 문화·체육 분야 2-13)

- 예산 집행 및 행정 여건과 상황 변화에의 대응성, 성과 달성도 측면에서도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일치성 그리고 달성률과 목표 산출 근거의 적절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장애인 문화·체육 분야 2-14)

-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장애

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이 중 사회보장사업 생활지원 분야의 장애인 대상 자립생활지원 사업들은 복지서비스와 일부 문화·체육 분야의 사업들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사회보장사업(300여 개) 중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의 사업 수는 11개로 4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음.

〈표 1-2〉 사회보장사업 중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사업

자립생활지원		담당 부처
사회참여지원	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복지부
	⑥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 역량 강화	여가부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권리 지원	⑦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비용지원, 성년후견선임비용지원	복지부
	⑧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 - 심리적 부담 완화, 가족관계지원	복지부
보조기기지원	③ 보조공학기기지원- 자립을 위한 직업생활지원	노동부
	② 장애인보조기구교부	(보건복지부)
의사소통지원	④ (청각언어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미래부
	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정보 격차 해소	미래부
이동권지원	⑨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	복지부
	⑩ 교통약자이용편의(기4-15)	국토부
	⑪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복지부

자료: 강신욱 등 (2015). pp.160-164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나. 문화여가생활지원정책의 평가 관련 연구 검토

□ 사회보장제도의 문화여가생활지원 분야의 제도는 그 목적과 대상, 그리고 사용되는 정책 수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양혜원, 2011).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는 문화시설 인프라 조성,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램 등 제공 콘텐츠의 다양성과 함께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적, 시간적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 보장을 핵심적 가치로 내포하고 있음.

- 조현성 등(2011)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의 핵심을 문화접근성 보장과 참여를 통하여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라고 강조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

화적 감수성 증진(광의의 문화복지)과 문화적 권리 증진(협의의 문화복지) 모두가 목적이 된다고 하였음(이혜승, 2011 재인용).

- 문화체육관광부(2015)는 문화(복지)를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영위를 통해 삶의 질을 한층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향유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상의 ‘문화예술생활지원 분야’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하여 최소한의 수준으로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

- 문화복지정책은 문화향유권 확산 차원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태동한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주로 시행되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2013)에 따라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생활지원 분야의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이혜승, 2011).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에서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⁴⁾

〈표 1-3〉 사회보장사업 중 취약계층 대상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 분류: 취약계층별

문화여가생활지원		담당 부처
장애인	①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문체부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방송통신부
노인	③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문체부
	④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	복지부
아동·청소년	⑨ 유·청소년의 문화·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기1-37)	문체부
농어촌주민	⑫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기4-27)*	농식품부/문체부
취약계층	⑩ 문화 격차 해소(통합문화이용권)	문체부

* 주: 4-2.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농촌 주민의 문화접근성 제고 지원.
자료: 강신욱 등 (2015). pp.160-164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14429호, 2016.12.20. 일부개정)

□ 문화여가생활지원 영역의 사회보장사업은 개별 제도별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제도에 국한. 제도별로 분석틀과 평가 방법이 상이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문화여가생활지원정책 제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 대표적인 문화사업인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⁵⁾은 5개 사업 중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통합문화이용권을 제외한 4개의 사업(사랑티켓, 소외계층문화순회, 방방곡곡문화공감,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을 구분하여 평가가 이루어져 왔음(정헌일 등, 2015)..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타당성 분석, 통합 사업의 환경 및 수요(추이) 분석 등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음(정무성 등, 2014)

- 평가는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지역 주관처 실무자, 문화복지전문인력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전문가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 심층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등으로 수행되었음.
- 평가결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예술프로그램 향유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및 여가 활동 기회의 확대를 통해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상 확대 및 지원(급여) 확대에 따른 예산 확대, 대상 선정의 형평성 제고, 카드사업과 기획사업의 역할에 대한 제고, 장기적 관점의 사업 계획과 성과평가 및 투자, 카드 지급 방식을 통한 개인당 지급 방식으로 전환.
- 이 외에 프로그램 다양화 노력,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이용의 활성화,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경험재적 특성을 고려한 아동·청소년 집단에의 지원 확대, 성과관리에서의 정성적 지표 고려 등을 제안하였음.

5)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특수한 소외 여건으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을 누리게 함으로써 문화양극화를 줄이고 창의적 힘과 문화적 삶의 질을 고양을 목적으로 함(정헌일 등, 2015).

〈표 1-4〉 이용자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타당성 및 효과성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

정책 단계	분석 내용	분석 수준	세부 내용	주요 접근 방법
투입	재원 충분성	전체 및 단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금액 대비 재정의 충분성 · 자원의 충분성 · 자원 제공의 충분성 	문헌·통계조사 이용자 조사 공급자 조사 전문가 인터뷰
과정	사업 내용 및 전달의 적절성	사업 내용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내용·수준의 적절성 · 프로그램 다양성 · 프로그램 흥미도 	이용자 조사 전문가 조사
		이용 편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 프로그램 제공 비중 · 정보 제공/홍보의 충분성 · 홍보 방법의 적절성·다양성(정보가 다양한 채널로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 교통편의 제공 · 이용의 편의성(이용자 측면) 	공급자 조사 이용자 조사 전문가 인터뷰
		운영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인력·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 모니터링 체계의 적절성 · 성과 측정·평가 체계의 적절성 · 예산 집행 체계의 적절성 	전문가 조사 전문가 인터뷰
산출	사업 만족도	프로그램별 만족도	· 이용자 프로그램별 만족도	이용자 조사
	사업 효과성	직접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접근성 향상 기여도 · 정서적 역량 강화 기여도 · 그 외의 사업 효과 	이용자 조사 전문가 조사 전문가 인터뷰
	사업 효율성	문화누리카드로의 일원화를 통한 통합적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행·스포츠관광 배우처 통합의 영향 · 통합적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실제로 제공한 경우 이용자의 만족도는? 	전문가 조사 전문가 인터뷰
		기관 간 연계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개발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자치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단,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의 원활 동 ·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활용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지역사회 대상자 정보 공유 - 업무 협조 	전문가 조사 전문가 인터뷰
성과	사업의 간접적·장기적 파급 효과	사업의 간접적, 장기적 파급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감 향상 정도 · 문화예술 및 여가 활동 확대에의 기여 	이용자 조사 전문가 조사

자료: 정무성 등. (2014). p.124

- 통합문화이용권을 제외한 4개의 사업(사랑티켓, 소외계층문화순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의 경우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컨설팅, 분석, 그리고 효과성 측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음(문화예술위원회, 2015)

- 각 평가 대상 사업별로 사업 목적(계획 단계), 사업 운영(집행 단계), 사업 성과 및 환류(성과 및 환류 단계) 영역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였음.
-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참여자의 문화예술 관심과 향유, 문화활동과 자원봉사, 삶의 만족도 등 사업의 효과성이 충분하고, 사업 운영 단계에서 참여기관 선정 절차의 제도화, 선정의 투명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지리적인 제약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 많아 격차가 큰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진 과정에서 형식적·절차적 측면의 일부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음.

〈표 1-5〉 2015년 문화나눔 세부 사업 평가지표 체계

평가 영역	평가지표	지표 유형	조사 방법
사업 목적 [계획 단계]	1-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명확성 · 사업의 필요성 · 사업 목적의 명확성	비계량	현장 조사, 인터뷰, 보고통계
	1-2. 목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타당성 · 목표 설정의 적절성	비계량	현장 조사, 인터뷰, 보고통계
	1-3. 사업 내용의 적절성 · 수혜 대상 설정 및 선정의 적합성 · 지원 내용 및 지원 수준의 적절성 · 재원 확보 및 투입의 적절성	비계량	현장 조사, 인터뷰, 보고통계
사업 운영 [집행 단계]	2-1.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 수행 주체 및 절차의 적절성 · 서비스 전달체계와 인력 활용의 적절성	비계량	현장 조사, 인터뷰, 보고통계
	2-2. 자원 투입의 효율성과 합리성 · 예산 집행률 ·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계량/ 비계량	현장 조사, 인터뷰, 보고통계
	2-3. 사업 집행 관리의 적절성 · 사업 이행 노력 · 홍보활동의 적절성	비계량	현장 조사, 인터뷰, 보고통계
사업 성과 및 환류 [성과 및 환류 단계]	3-1.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 달성도(수혜자 수, 이용자 만족도) · 사업 효과	계량/ 비계량	만족도조사, 효과성조사, 현장 조사, 인터뷰, 보고통계
	3-2. 사업 개선 노력도 · 모니터링 및 민원 처리의 적절성 · 모니터링 및 민원 결과의 사업 반영 노력	비계량	현장 조사, 인터뷰, 보고통계

자료: 정현일 등. (2015). p.34

- 한편 이해승(2011)은 취약계층 문화복지사업의 계획·집행·성과 차원에서 추진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취약계층 문화복지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적 개선 방안 모색을 시도하였음.
-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체계를 체계화하며 예산과 조직을 마련하고 있는지, 핵심 사업들의 사업 대상과 사업 목표가 명확한지, 각 사업의 성과는 어떠한지를 검토하고자 하였음.
 - 이해승(2011)은 다음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틀을 활용하여 문화소외(취약)계층 문화(복지)사업의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특히, 사업 성과 차원의 성과목표 관리 및 수혜자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측정은 미흡하여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표 1-6〉 문화소외(취약)계층 문화(복지)사업의 분석 요소

부문	소부문	분석 요소
계획: 목표 및 전략	목표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표를 명확하게 인지하는가 - 사업 대상은 명확하게 구분·정의되는가
	전략의 체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계획과 전략 목표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전략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설계하였는가 - 전략과 사업, 상위 사업과 세부 사업은 연관성이 있는가
	예산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은 안정적으로 조달되는가
집행: 추진 및 전달체계	전달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기관(주관처), 사업자 선정 기구와 선정 기준은 적절한가 - 프로그램 선정 기구 및 선정 기준은 적절한가
	기관 간 협력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간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과: 사업 성과	사업 성과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는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성과목표 달성도

자료: 이해승. (2011). pp.30-31

제 2 장

평가 방법

제1절 평가 개요

제2절 평가 방법

제1절 평가 개요

1. 기본 방향

□ 생활지원 분야 현황 분석 및 성과평가

○ 생활지원 분야 및 세부 사업군 평가를 위한 평가틀 개발.

- 사회보장사업 공통 평가틀(강신욱 등, 2015)을 바탕으로 생활지원 분야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한 평가틀 마련.
- 이를 위해 평가단을 활용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 개별 사업 평가를 토대로 세부 사업군 평가: 현황 분석 및 한계 진단.

- 생활지원 분야의 평가는 생활지원사업군 사업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세부 사업군’으로 묶고, 이를 통칭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개별 사업들을 세부 사업군 수준으로 재분류하였음.
- 이후 세부 사업군 명칭에 해당되는 다른 개별 사업들을 추가·삭제하여 평가 대상을 명확히 설정.
- 평가의 방향은 세부 사업군에 해당되는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세부 사업군 수준으로 평가의 범위를 넓혀 통합적이고 전체론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사업들을 평가함. 따라서 평가의 주요 수준은 ‘세부 사업군 수준’으로 설정.

[그림 2-1] 사회보장제도 생활지원 분야 평가 기본 방향

	STEP 1: 세부 사업 평가	STEP 2: 세부 사업군 평가	STEP 3: 사업군 평가
평가 차원	• 각 개별 사업	개별 사업을 포괄하는 세부 사업군 • 자립생활지원사업군: 자립여건지원, 보조기기 및 접근권 지원 •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군: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	• 자립생활지원사업군 •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군
평가 방안	• 개별 사업 평가 • 성과 및 한계 • 개선 방안 제시	각 사업별 특수성, 이질성 및 상위 개념의 포괄성을 고려하여 세부 사업군 단위 평가 실시	• 사업군 단위 평가 한계

2. 평가 범위

□ 평가 대상 사업군

○ 기존 사회보장사업 사업군 구분

- 총 335개의 사회보장정책 사업 중 (6) 생활지원에 분류되어 있는 사업들은
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생활지원사업 ② 가족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지원사업 ③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 ④ 재해 및 기타피해보호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강신욱 등, 2015).
-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활지원사업들은 사회보장의 주요 기능인 (1) 교육, (2) 돌봄, (3) 의료지원, (4) 고용, (5) 주거, (7) 생계(현금급여)를 제외한 그 외 사업들의 묶음으로 사업의 성격이 상이하고, 파편적이며 분절적인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기존의 생활지원 분야 분류에서 ② 가족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지원사업과 ④ 재해 및 기타피해보호사업에 해당하는 개별 사업들은 대상과 규모, 사업의 성격 면에서 평가를 위한 공통 기준 및 사업 목적의 동일성을 찾기가 어려움.
- 또한 사업의 내용과 성격이 분절적이고 협소하여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고유 목적인 전체론적 틀을 가지고 거시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에 제한적이라고 판단.

〈표 2-1〉 사회보장사업 사업군 구분

생활 지원 (41)	자립생활지원(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북) • 발달장애인 상년후견심판비용지원, 상년후견선임비용 지원(북) •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미) •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북) •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북) • 장애인보조기구교부(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공학기기지원(노) • (청각언어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미)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여)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북) • 교통약자이동편의(국)(기본계획 4-15)
	가족 및 지역복지서비스지원(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북)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여) •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북) •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농) •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비이행지원(한부모)법률서비스(여)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여)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여)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여) • 농업안전보건센터(농)(기본계획 4-25)
	문화여가생활지원(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문화·예술지원(문) • 문화통합이용권(문) •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자막방송수신기)(방) •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화면해설방송수신기)(방)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문)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여) •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문)(기본계획 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활성화(문)(기본계획 2-8) • 학교체육활성화지원(교)(기본계획 1-24) •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문)(기본계획 1-37) • 문화예술교육활성화(문)(기본계획 1-23) • 문화정책 개발(문)(기본계획 1-26)- •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북)(기본계획 3-21)
	재해 및 기타피해보호(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폐근로자 보호(노)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가입지원(북) • 풍수해보험료지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해) • 식면피해구제급여(환)

자료: 강신욱 등 (2015). pp.160-164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 따라서 생활지원사업 중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생활지원사업과 (2) 문화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여가지원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설정=>세부 사업군을 설정하고 평가를 진행하였음.

〈표 2-2〉 평가 대상 사업군

구분	사업군	비고
평가 대상 사업군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생활지원사업 (3)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	- 세부 사업군 설정
제외	(2) 가족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지원사업 (4) 재해 및 기타피해보호사업	- 대상이나 사업의 규모 면에서 너무 지엽적 - 사회보장사업 평가의 내용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

□ 세부 사업군 명칭

○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군에 있는 개별 사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여성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사업의 평가 결과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장애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오해의 여지가 있음.

- 즉 (6) 생활지원사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생활지원사업에 속한 개별 사업들의 성격은 중증장애인, 여성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사업들로 매우 지엽적이나, ‘장애인자립생활’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모든 장애인복지정책의 이행 결과 야기될 수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결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해의 여지를 고려하여 세부 사업군의 명칭을 ‘장애인자립생활군’보다는 ‘장애인자립여건지원’으로 수정.

- 장애인복지정책 대상 중에서도 장애인복지정책의 주된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한 이들(중증장애인이나 여성 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음.

〈표 2-3〉 세부 사업군 분류

사업군	세부 사업군
(1) 자립생활지원사업	㉠ 자립여건지원 ㉡ 보조기기 및 접근권지원
(3)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	㉢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

□ 세부 사업군 분류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생활지원사업과 문화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군 내 세부 사업군 구분을 토대로 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개별 사업을 선정.

－ 세부 사업군의 구분 및 명칭은 세부 사업군 내 개별 사업들의 성격을 포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

- 개별 사업들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존 세부 사업군 분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의 의의가 크지 않은 개별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부 사업군의 하위 사업으로 재배치(예: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

- 기존 사회보장 세부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업군 평가(명칭 고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추가로 평가.

－ 사회보장사업 기본평가의 취지와 의의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개별 사업 선정 시 지방이양사업 및 지자체 사업, 일회성 사업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본 연구에서의 세부 사업군 구분 및 평가 대상 개별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4〉 세부 사업군 및 세부 사업 구분

세부 사업군	세부 사업	대상	주요 내용	담당 부처
① 자립여건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추가)	1~3급 등록 장애인 중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	•활동보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보건 복지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62곳)를 통해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및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보건 복지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성인 여성 장애인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22곳)를 통해 상담, 정보 제공 및 여성 장애인 아웃리치, 역량 강화 교육,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사후 관리 및 자조모임 등 여성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사회참여지원서비스 제공	보건 복지부
	중앙발달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추가)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지역 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	보건 복지부

44 사회보장제도 생활지원 기본평가

세부 사업군	세부 사업		대상	주요 내용	담당 부처
				원, 권익옹호사업 등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지원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 비용지원 및 성년후견선임비용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및 후견인	•후견심판 청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1인당 최대 50만 원) 및 후견인 활동실비 지원(1인당 10만 원)	보건 복지부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개별·집단 상담 제공	보건 복지부
② 보조기기 및 접근권 지원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 기준액 이내 품목 무료로 교부	보건 복지부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사업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추가)	•품목별 지원 기준액 이내 보장구 구입비 90% 지원	보건 복지부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	•품목별 지원 기준액 이내 보장구 구입비 100%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 고용 사업주 및 근로장애인	•작업용 보조공학기지지원, 개발 및 보조공학기기 인식 개선을 위한 보조공학 박람회 등	고용 노동부
		보조기기센터 사례관리사업	장애인 전체(추가)	•보조기기서비스 사례관리 및 품질관리	보건 복지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장애인 전체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보급, 보조기기개발지원, 임대 보급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접근권 지원	교통약자이동편의 지원사업	교통약자, 장애인	•저상버스 보급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보급	국토 교통부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사업	1~4급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 (특수차량+운전전문강사지원)	보건 복지부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지원사업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으로 훈련하여 분양	보건 복지부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보장사업	시각, 청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에게 장애인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방송수신기 보급(저소득층 우선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소외계층통신접근권 보장사업	청각, 언어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레터링서비스 제공 및 대국민 홍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③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문화소외계층	•문화소외지역의 문화향유시설 접근	문화체육

세부 사업군	세부 사업	대상	주요 내용	담당 부처
취약계층 문화여가 생활지원	확대(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작은도서관조성지원사업)	문화취약지역	성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 제공	관광부
			•작은도서관조성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문화프로그램	60세 이상 어르신	•전국 문화시설에서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60세 이상 노인 및 전문 퇴직자	•노인자원봉사단(클럽) 조직 및 관련 행사 개최 등 사업 지원	보건복지부
	문화 격차 해소(통합문화이용권사업)	경제적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
	유·청소년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취약계층 유청소년 (만 5~18세)	•소외계층 유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의 참여 기회 제공 •대상자 1인당 매월 1회 최대 7만원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	장애인, 비장애인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향수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사업별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작성(각주 10, 11, 14 참조).

□ 평가 기간

- 평가 기간은 평가 근거 자료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으로 함.

3. 평가 의의

- 장애인 중에서도 주된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자립여건 지원이라는 세부 사업군 수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나름의 특수성과 의미가 있음.

- 생활지원사업군 내 장애인 자립여건지원사업군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제외⁶⁾하고는 장애인 복지정책 내에서도 대상과 규모가 매우 작은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음.

6)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여건 지원'이라는 세부 사업군의 명칭에 따라 본 연구에서 추가하여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생애주기별·기능별 기준에 따른 총 300여 개 사회보장정책사업의 7개 구분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던 사업임.

- 당초의 분류대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제외할 경우 자립여건지원사업군 예산 규모는 80억 원으로, 장애인 분야 예산의 0.41% 수준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예산 기준으로는 0.024%에 해당함.⁷⁾⁸⁾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5220억 원)을 자립여건지원사업군에 포함할 경우의 예산 규모는 장애인 분야 예산의 27.48% 수준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예산을 기준으로 1.59%에 해당함.

〈표 2-5〉 자립여건지원사업군 예산 규모

구분	사업명	'16년 예산(백만 원)	비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예산		33,407,909	100.0	-
장애인 분야 예산 소계		1,929,184	5.77	100.0
자립 여건 지원 (6개 사업)	소계	530,075	1.590	27.48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22,070	1.563	27.06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3,717	0.011	0.193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1,187	0.004	0.062
	중앙발달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700	0.002	0.036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비용지원 및 성년후견선임비용지원사업	1,501	0.004	0.078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900	0.003	0.047

주: 2016년 예산은 추경을 반영한 예산 기준임.

자료: 1)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 사업별 결과보고서.

○ 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활동보조, 이동권, 권익옹호와 보장구 지원 등 사회 환경의 장벽 제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장벽 제거라는 전체론적 관점에서, 주된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제도와 지원의 수준을 평가하여 거시적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또한 개별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기기 및 접근권 관련 파편적 사업들을 ‘보조기기 및 접근권’이라고 하는 세부 사업군 수준에서 평가. 기존 장애인복지 평가

7) 2016년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사업 예산(추경반영)은 33조 4079억 원이며, 이 중 장애인 분야 예산은 1조 9291억 원으로(보건복지부, 2017), 전체 사회복지사업의 예산의 5.9%에 해당

8) 장애인 분야 사업에서는 장애인연금 5584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220억원으로 장애인 분야 사회복지 예산 중 각각 37.3%, 2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방식과는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음.⁹⁾

○ 즉 사회보장제도 내에서도 매우 특수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지원의 수준을 평가하여 거시적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표 2-6〉 2016년 장애인 분야 단위사업별 예산(추경 반영)

단위사업	세부 사업	'16년 예산(백만 원)	비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예산		33,407,909	100.00	-
장애인 분야 예산 소계		1,929,184	5.77	100.00
장애인 소득보장	소계	720,283	2.16	37.34
	장애수당(기초)	77,582	0.23	4.02
	장애수당(차상위 등)	55,059	0.16	2.85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29,185	0.09	1.51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연금	558,457	1.67	28.95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 조성	소계	4,692	0.01	0.24
	장애인자녀학비지원	-		
	장애인보조기구지원	3,175	0.01	0.16
	장애인지원관리	1,517	0.00	0.08
장애인 자립자금융자	소계	435	0.00	0.02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435	0.00	0.02
장애인 선택적복지	소계	612,968	1.83	31.77
	장애인활동지원	522,070	1.56	27.06
	장애아동가족지원	78,732	0.24	4.08
	여성장애인지원사업	2,720	0.01	0.14
	발달장애인 지원	9,446	0.03	0.49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소계	471,467	1.41	24.44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34,479	0.10	1.79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436,988	1.31	22.65
장애인 단체지원	소계	12,782	0.04	0.66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5,671	0.02	0.29
	장애인단체	7,111	0.02	0.37
장애인 일자리지원	소계	70,725	0.21	3.67
	장애인일자리지원	70,725	0.21	3.67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지원	소계	7,218	0.02	0.3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5,279	0.02	0.27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616	0.00	0.03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 개선	1,323	0.00	0.07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소계	1,452	0.00	0.08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1,452	0.00	0.0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소계	18,477	0.06	0.9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8,477	0.06	0.96
재활병원 건립	소계	8,685	0.03	0.45
	재활병원 건립	8,000	0.02	0.41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685	0.00	0.04

자료: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9) 보조기기 및 접근권지원원은 복지부 예산 및 건강보험기금, 부처별 예산이 혼재되어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음.

- 문화여가생활지원도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상대적 박탈감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문화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이 사회보장 평가의 하나가 되는 것임.
- 즉 사회보장기본법상의 ‘문화예술생활지원’은 문화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으로,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함.

- 이처럼 생활지원 분야의 사업은 각 개인이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사업들은 특정한 계기에 시작되어 소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개별 부처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통합적인 큰 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할 것임.

제2절 평가 방법

□ 평가단의 구성

○ 평가단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현장 전문가 및 관련 학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이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실제 집행에서의 다양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음.

[그림 2-2] 생활지원군 평가단 구성



□ 평가단의 운영

- 평가단의 역할은 사업 분야별 평가 방안을 검토하고, 세부 추진 방향 논의, 개별 사업의 평가 및 세부 사업군 평가에 대한 논의와 자문(총 18명+연구진)이며, 정성평가를 위한 타당성 확보를 목적으로도 운영되었음.

〈표 2-7〉 평가단 운영 현황

구분	일시	주요 내용	비고
연구진 회의	17. 3. 24.(금)	•평가 대상 범위 논의 •평가지표 구성방안 검토	원내외 연구진
	17. 4. 12.(수)	•평가 대상 사업 및 사업군 분류방안 논의	
	17. 6. 8.(목)	•평가 대상 사업 및 사업군 분류(안) 검토 •평가지표(안) 검토	
평가단 구성	~17. 4. 28.(금)	•분야별 평가위원 추천	원내외 연구진 추천
평가단 회의	17. 5. 22.(월)	•평가방안 논의(장애 분야)	분야별 평가위원
	17. 6. 15.(목)	•평가 대상 사업 및 사업군 확정(장애 분야) •평가방안 논의(문화분야)	분야별 평가위원
	17. 6. 23.(금)	•평가틀 의견 수렴(서면)	연구진 및 평가단
	17. 7. 12.(수)	•평가 대상 사업 및 사업군 확정(문화분야)	분야별 평가위원
개별사업평가	~17. 8. 18.(금)	•개별 사업 기초 평가	평가단
세부 사업군 평가	~17. 9. 1.(금)	•세부 사업 평가결과 검토 •세부 사업 평가결과 토대 세부 사업군 단위 평가	원내외 연구진
	~17. 10. 27.(금)	•세부 사업군 단위 평가결과 점검 및 개선 방안 도출	원내외 연구진
평가 결과 검토	17. 11. 2.(목)	•세부 사업 평가결과 및 개선 방안 논의	분야별 평가위원
	~17. 11. 9.(목)	•세부 사업 평가결과 및 개선 방안 의견수렴	평가위원(전체)

□ 평가틀

- 평가지표는 기존 사회보장 기본평가 공통지표를 활용하되 사업 특성과 자료 활용 범위를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설계-투입/집행-산출-성과-영향’의 큰 틀에서 생활지원 분야 현황 분석 및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구성,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 평가를 적용.

- (설계)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대상자의 표적화 정도, 사업 간 관계, 모니터링의 체계성 등 검토.
- (투입) 자원 투입의 충분성, 사업 예산의 적절성, 지역적·시기적 자원 투입의 적절성 등 검토.
- (산출)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 사업 만족도, 사업의 효율성 등 검토.
- (성과) 성과 달성 여부, 평가의 환류 등 검토.

○ 평가지표의 모집단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표 2-8〉 평가틀

단계	평가지표	주요 내용	평가 구분		평가 기준	판단 근거
설계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본 사업이 필요한 대상자를 얼마나 포괄하는가?	혼합	정량	대상자 포괄성	이용자 수/대상자 수*100
				정성	대상자 포괄의 충분성(종합)	사업 대상 설정 전반
	대상자의 표적화 정도	지원 대상자가 욕구가 강한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가?	혼합	정량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내용 구성에서의 욕구 수준 반영 여부	욕구 수준별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수준 결정 체계 존재 여부(있다/없다)
				정성	표적화 적절성(종합)	대상자 표적화 전반
	사업 간 관계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정성	정성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업 대상, 급여/지원 내용
				정성	사각지대 존재 여부	사업 대상, 급여/지원 내용
	모니터링의 체계성	모니터링을 통해 여건,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했는가?	혼합	정량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여부
				정성	모니터링 체계성(종합)	모니터링 체계 전반(구성 및 운영 현황 포함)
투입	자원 투입의 충분성	지원 대상의 규모를 고려한 예산 및 인적자원 투입이 충분한가?	혼합	정량	단위 인구당 투입 사업 예산	이용자 1인당 투입예산=사업예산/이용자 수
				정량	단위 인구당 투입 인적자원	이용자 1인당 투입 인적자원=투입인적자원/이용자 수
				정성	자원 투입 충분성(종합)	자원 투입 충분성 전반

단계	평가지표	주요 내용	평가 구분		평가 기준	판단 근거
	사업 예산의 적절성	총예산 대비 실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절한가?	혼합	정량	실제 사업비 비중	실제 사업비 비중=경상비 제외 사업비/총사업비*100
				정성	사업 예산의 적절성(종합)	사업예산의 적절성 전반(연차별 예산 반영의 노력 정도 포함)
	지역적, 시기적 자원 투입의 적절성	자원 투입(사업의 집행, 급여의 제공)이 지역적,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정성	정성	지역적 자원 투입 적정성(종합)	지역적 자원 투입 적정성 전반
				정성	시기적 자원 투입 적정성(종합)	시기적 자원 투입 적정성 전반
산출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	서비스 수요 대비 수급률은 적절한가?	혼합	정량	신청률	신청률=신청자 수/대상자 수*100
				정량	인정률	인정률=인정자 수/신청자 수*100
				정량	수급률	수급률=수급자 수/인정자 수*100
				정성	수급의 적정성(종합)	수급의 적정성 전반
	사업 만족도	사업의 이용자들이 만족하였는가?	혼합	정량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존재 여부(있다/없다)
				정량	이용자 만족도 결과 반영 여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반영하거나 수정한 실적 여부(있다/없다)
				정성	이용자 만족도 반영의 적정성(종합)	이용자 만족도 반영의 적정성 전반
	사업의 효율성	사업 수행 시 기관 간 연계 협력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였는가?	혼합	정량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실적 여부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및 개발을 위한 협력 실적 여부(있다/없다)
				정성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효율성(종합)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과의 연계나 협력 실적 효율성 및 자원 활용성 전반
성과	성과 달성 여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혼합	정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성과 목표 설정 근거의 객관성 및 합리성
				정량	목표 달성률	달성률=달성/목표*100
				정성	성과 달성 수준(종합)	성과 달성 수준 전반
	평가의 환류	사업 과정 및 성과에서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를 환류(반영)하였는가?	정성	정성	사업 환류의 적정성 및 체계성	전년도 사업성과 및 평가 결과의 환류 적정성 및 체계성
				정성	성과 개선 노력의 적절성	성과 개선 노력의 적절성 및 타당성

제 3 장

평가 결과

제1절 자립여건지원

제2절 보조기기 및 접근권지원

제3절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

제1절 자립여건지원

1. 세부 사업군 현황

□ 목표

- 중증장애인, 여성 장애인,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이들의 가족) 등 다중 차별에 직면한 장애인의 역량 강화, 권익옹호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자립여건 구축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주요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등 총 6개 사업, 5,300억 원 규모.

〈표 3-1〉 자립여건지원사업군 세부 내용 개요

사업명	대상	내용	'16년 예산 (백만 원) ¹⁾	소관 부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3급 등록 장애인 중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	•활동보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522,070	보건 복지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62곳)를 통해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및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3,717	보건 복지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성인 여성 장애인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22곳)를 통해 상담, 정보 제공 및 여성 장애인 아웃리치, 역량 강화 교육,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사후 관리 및 자조모임 등 여성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사회참여지원서비스 제공	1,187	보건 복지부
중양발달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지역 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 권익옹호사업 등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지원서비스 제공	700	보건 복지부

사업명	대상	내용	'16년 예산 (백만 원) ¹⁾	소관 부처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비용지원 및 성년후견선임비용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및 후견인	•후견심판 청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1인당 최대 50만 원) 및 후견인 활동실비지원(1인당 10만 원)	1,501	보건 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 자 녀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월 3~4회 이상, 12 개월간 개별/집단 상담 제공	900	보건 복지부

주: 2016년 사업 예산은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업별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함.
자료: 사업별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관련 평가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¹⁰⁾

2. 단계별 평가 세부 결과

가. 설계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의 명확성

- 자립여건지원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 필요성 및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었
고, 대상자 설정도 포괄적이며, 지원 대상도 욕구가 강한 집단에 집중되어 있음.
- 다만, 몇몇 개별 사업은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대상자의 표적화, 사업 간
관계 및 성격 규명이 요구됨.

□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및 대상자의 표적화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신청자격을 1~2급에서 3급으로 확
대하여 대상자설정의 포괄성을 높였음.

* 신청자격 : ('14) 장애 1, 2급 → ('15.6월) 장애 3급까지 확대

10) 사업별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017).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017).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여성가족부. (2015). 여성가족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여성가족부
내부 자료.
- 중앙발달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
업계획(각 연도);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실적보고서(각 연도).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비용지원 및 성년후견선임비용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017). 세입세출 및 기
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 그러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설정하는 방식 하에서는 일부 4급 이하 장애인이 본 사업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더라도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 향후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19년 예정) 자격기준 완화 검토 필요

□ 사업 간 연계

- 현재 만 65세가 도래하면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로 전환되므로 사업 간 중복은 없지만,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고려 없이 법령에 의해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 저하 및 서비스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

□ 사업 간 관계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권익옹호사업의 경우 향후 정비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서비스 중복 문제가 우려되므로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사업 운영의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해소해야 함.

□ 사업의 성격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범사업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05년 10개 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현재 62곳이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 및 운영.

□ 모니터링의 체계성

- 개별 사업 중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의 경우만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있음(6개월~1년 단위로 종결되는 상담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이 외 다른 개별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가 해당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아님. 또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시군구에서 1년에 1회 실시하는 지도·점검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음.

나. 투입

□ 자원 투입의 충분성

○ 자립여건지원사업의 총예산은 꾸준히 증가

– 이러한 예산의 증가는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량의 증가를 나타내지는 못함.

– 이는 서비스 단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 증가(장애인활동지원사업*) 또는 지원하는 센터 개수 증가로 인한 소폭 상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임.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30분 미만 방문간호): ('15)31,760원→('16)32,630원

**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율: ('14)56개소→('15)61개소→('16)62개소

– 따라서 지원 대상의 규모와 서비스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3-2〉 자립여건지원사업군 연도별 사업 예산 현황

사업명	예산(백만 원)		
	'14	'15	'1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28,454	467,892	522,07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3,360	3,660	3,717
여성장애인이웃센터	1,289	1,187	1,674
중앙발달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500	700	700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비용지원 및 성년후견선임비용지원사업	1,158	1,023	1,501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1,332	1,708	900
합계	436,093	476,170	530,562

주: 사업 예산은 예산액 기준으로 당해 연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함.

자료: 사업별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관련 평가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각주 10 참조).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의 경우 2016년도 예산은 전년도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되어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우려.

– '18.1월부터 소득기준(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을 폐지하여 지원 강화되었으나, 사업목표량이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소

* '14년 2,500명→'15년 1,400명→'16년 700명(보건복지부, 2016)

다. 산출

□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

○ 자립여건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일례로 발달장애인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군 내 예산은 소폭 증가한 상황으로 대상자 증가 규모 등 서비스 수요를 고려한 예산 검토 필요

* 발달장애인 인구 추이 : ('11) 18만명 → ('16) 22만명

○ 즉 투입 예산의 소폭 증가, 변동 없음 또는 감소로 인해 서비스 욕구 대비 적정한 서비스 급여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비용지원 및 성년후견선임비용지원사업 예산은 소폭 증가.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예산은 1곳당 1억 5,000만 원으로 변동 없음 (2014년 56곳→2015년 61곳→2016년 62곳), 중앙발달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2015년, 2016년 예산 변동 없음(2015년부터 공공후견 및 권리구제 사업이 포함되어 예산 증액)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은 예산 감소를 보여 줌.

□ 급여의 충분성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급여 이용률은 높아지지 않고 있고, 서비스 만족도는 감소하는 추세임.

* 급여 이용률: 82%(2014년) → 84.4%(2015년) → 84%(2016년), (급여)목표 달성률 107.9%(2014년) → 100.4%(2015년) → 98.8%(2016년).

* 이용자 만족도: 83.7%(2014년) → 81.5%(2015년) → 79.1%(2016년), (만족도)목표 달성률 102%(2014년) → 98.8%(2015년) → 96.5%(2016년).

- 이는 수급자가 된 이후에도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부담으로 가족이 돌보거나 또는 병원 시설에 입원(소)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 또한 본인부담금 산정 시 가구소득이 기준이기 때문에 노령·장애가정의 수급

자는 납부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

- 최중증 외상장애인, 도전적 행동이 강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과 제
공기관에 의한 배제 현상 발생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함.
- 그뿐만 아니라 심야시간, 공휴일의 경우 활동지원 인력을 수급하기가 어려워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는 투입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사회 중증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의 서비스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라. 성과

□ 성과 달성 여부

- 중증장애인, 여성 장애인,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등 다중 차별에 직면한 장
애인의 자립여건을 지원하며 동시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자
립여건지원 세부 사업군의 개별 사업 시행 주체와 제공 인력은 충실히 사업을
수행.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개별 사업은 성과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목
표치가 부재함.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및 중앙발달장애아
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치 부재.
 - 본 사업을 통한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어떠한 긍정적 변화가 도출되
었는지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움.
- 이 외 다른 개별 사업들의 성과지표는 대부분 만족도 또는 이용률 등 가장 낮
은 수준의 성과지표로 구성(본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긍정적 변화
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기본적인 목표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
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임에

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장애인의 자립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려움.

- *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설정하거나 산출 중심의 성과지표를 제시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중앙발달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성과지표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표 3-3〉 자립여건지원사업군 성과지표 및 달성률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A)	실적(B)	달성률(B/A)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급여 이용률	85%	84%	98.8%
	이용자 만족도	82점	79.1점	96.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	-	-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	-	-	-
중앙발달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비용지원 및 성년후견선임비용지원사업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600명	815명	136%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이용자 만족도	84.5점	80.4점	95.1%

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중앙발달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지원사업의 경우 성과 목표치를 확인할 수 없었음.

자료: 사업별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관련 평가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각주 10 참조).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양적·질적 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마련 필요

- * (예시) 장애인 자립수준 향상 정도,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완화로 인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정도 등

□ 평가의 환류

- 자립여건지원사업군의 개별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평가 환류 체계가 미흡.

제2절 보조기기 및 접근권 지원

1. 세부 사업군 현황

□ 목표

-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고용 안정, 정보 격차 해소 및 자립생활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권과 이동권 지원.

□ 주요 사업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보장구급여지원, 교통약자이동지원, 방송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등 총 10개 사업, 2,397억 원 규모.
- 보조기기지원사업은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 작업용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지원사업 등 장애인에게 직접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
 - 접근권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사업,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사업, 장애인보조전문훈련기관지원사업,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사업 등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권과 이동권을 지원하는 사업.

〈표 3-4〉 보조기기 및 접근권 지원 사업군 세부 내용 개요

사업명	대상	내용	'16년 예산 (백만 원) ¹⁾	소관 부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 기준액 이내 품목 무료로 교부	1,375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사업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품목별 지원 기준액 이내 보장구 구입비 90% 지원	110,077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	•품목별 지원 기준액 이내 보장구 구입비 100% 지원	27,869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 고용사업주 및 근로장애인	•작업용 보조공학기기지원, 개발 및 보조공학 기기 인식 개선을 위한 보조공학 박람회 등	7,200	고용노동부 ²⁾

사업명	대상	내용	'16년 예산 (백만 원) ¹⁾	소관 부처
보조기기센터 사례관리사업	장애인 전체	•보조기기서비스 사례관리 및 품질관리	1,470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장애인 전체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보급, 보조 기기 개발 지원, 임대 보급	1,29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교통약자이동편의 지원사업	교통약자,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저상버스로 보급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교통수단 보급	40,350	국토교통부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사업	1~4급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특수차량+운전 전문강사지원)	616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지원사업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으로 훈련하여 분양	95	보건복지부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시각, 청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에게 장애인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방송 수신기 보급(저소득 층 우선 보급)	2,858	방송통신 위원회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사업	청각, 언어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레터링서비스 제공 및 대국 민 홍보	1,48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주: 1) 2016년 사업 예산은 예산액 기준으로 당해 연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함.

2) 고용노동부는 근로 장애인 이외 산재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기지원사업(근로복지공단) 진행.

자료: 사업별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관련 평가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¹¹⁾

11) 사업별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보건복지부. (2016). 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보건복지부. (2017).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보건복지부. (2016). 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의료급여 대상 장애인): 보건복지부. (2016). 의료급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 보조공학기기지원: 고용노동부 내부 자료.
- 보조기기센터사례관리사업: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2017).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201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계획;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내부 자료.
-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사업: 국토해양부. (2012).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12~'16); 국토교통부. (2016).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사업: 보건복지부. (2016).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016).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자료.
- 소외계층 통신접근권보장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자료.

2. 단계별 평가 세부 결과

가. 설계

□ 사업 필요성 및 목적의 명확성

○ 보조기기(보장구)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개선 및 위험방지, 자립생활 증진, 고용 안정, 정보 접근성 향상 등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설계는 적절함.

－ 다만,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업을 여러 부처¹²⁾에서 파편화된 형태¹³⁾로 운영 중이며 이로 인한 보조기기 서비스 접근 한계와 사례관리의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복지부),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건보공단),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고용부),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과기부)

○ 접근권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 필요성 및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었고, 대상자 설정도 포괄적이며, 성과지표 또한 적절하게 제시되었음.

－ 다만, 몇몇 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표적화 정도와 사업 간 관계를 검토하여 대상자의 표적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사업의 경우 시각 및 청각장애인보다 오히려 지체장애인에게 보조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양되고 경증 장애인에게 더 많은 분양이 이루어짐.

-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사업은 시·청각 장애인(8두)보다 지체/경증장애인(20두)에게 더 많은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향

- 방송 수신기 보급 시 소득수준-급수-연령 순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일차적으로 방송 수신기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임.

- 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사업의 경우 경증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통신중계서비스가 제공됨.

12) 보건복지부(4개 사업), 고용노동부(2개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개 사업).

13) 지원 대상 장애유형의 편중, 지원 품목의 제한, 지원 예산의 불충분.

□ 사업 간 관계

-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사업과 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 사업의 경우 타 사업과의 중복성이 일부 있음.
 -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사업은 현재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동지원사업과, 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사업은 수화통역센터와 다소 중복적임.
 -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중복성 논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됨.

□ 모니터링의 체계성

- 대부분의 접근권 사업에서 모니터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사업과 같은 법정 계획을 통한 모니터링이 강제화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모니터링 체계가 없음).
 - 향후 모든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는 법정계획을 마련할 필요 있음.

나. 투입

□ 사업 예산의 충분성

- 보조기기지원사업의 총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에서 총예산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 * 보조기기 사업군 총예산 추이(억 원): (2014)627 → (2015)743→(2016)1,485
 - ** '16년 사업군 총 예산(1,947억원) 중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사업의 비중은 약 70.8%이며,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 사업의 비중은 20.7% 수준
- 한편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과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은 사업 집행 실적이 곧 사업 규모가 되는 반면, 타 사업들은 계획 예산(PPBS) 편성으로 예산의 추이가 정체되어 있음.
 -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의 경우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총급여액 50조

8,907억 원 중 보장구 급여액은 1,100억 원으로 0.22% 수준.

〈표 3-5〉 보조기기지원사업 연도별 사업 예산 현황

사업명		예산(백만 원)		
		'14	'15	'16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1,587	1,375	1,375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	건강보험	34,240	46,324	110,077 ¹⁾
	의료급여	17,524	16,876	27,869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8,000	8,000	7,200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1,000	1,175	1,290
보조기기센터사례관리사업		1,460	1,670	1,470
합계		63,811	75,420	1,139,975

주: 1)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에서 2016년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보청기 기준 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보청기 급여액 인상('14년 42억 → '16년 670억)에 따른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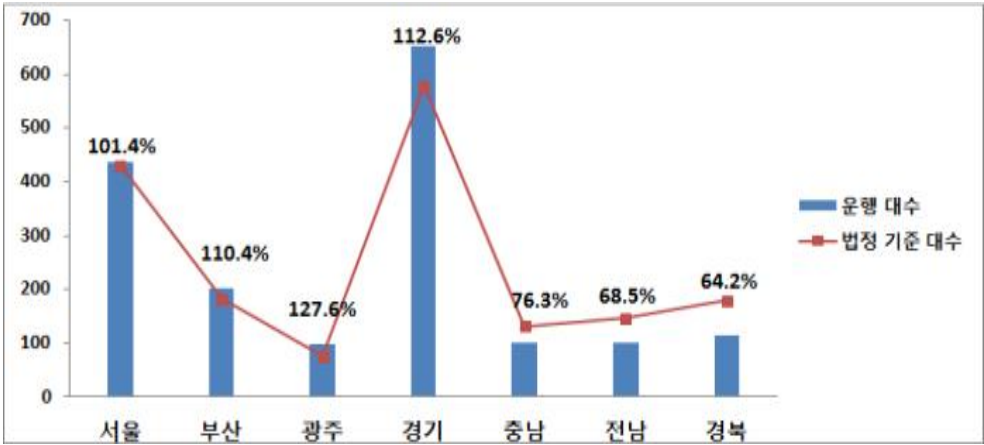
자료: 사업별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관련 평가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각주 11 참조).

- 교통약자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16년 기준, 각 19%(시내버스 보급 대비)와 103.3% 수준

□ 자원 투입의 충분성

- 접근권지원사업의 총예산은 매년 증가, 그러나 예산의 95% 이상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접근권지원사업의 규모는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를 기반으로 투입 자원이 산출 되기보다는 전년도 대비 점증적으로 예산이 산출. 투입 자원이 충분하다고 논 하기에는 어려움.
- 특히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역 간 편차가 심함.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교통약자 차량 도입을 위한 매칭예산 확보 부족 등으로 서비스 수급에 지역 간 불균형 존재

[그림 3-1] 지역별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 및 보급률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내부자료

□ 자원투입의 적절성

- 사업별로 성격이 상이하긴 하지만,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비용(예를 들어 인건비와 경상비 등에 대한)에 대한 고려 필요.

<표 3-6> 접근권지원사업 연도별 사업 예산 현황

사업명	예산(백만 원)		
	'14	'15	'16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사업	43,980	40,475	40,350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사업	544	544	616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사업	100	100	95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3,002	3,002	2,858
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사업	—	—	1,482
합계	47,626	44,121	45,401

주: 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사업의 경우 2014년, '15년 예산 파악이 어려움.
자료: 사업별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관련 평가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각주 11 참조).

다. 산출

□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

○ 보조기기지원사업의 총 지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예산의 변화 추이와 유사하게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에서 많은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

- 한편 대부분 사업이 협소한 지원 품목, 낮은 기준금액, 일부 장애 유형에 편중된 지원, 장애인 욕구에 비해 낮은 지원 등으로 급여 충분성이 낮아 보조기기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기능 향상 및 자립생활을 도모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음(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에서 차량 개조 등 고가 지원 사업 확대).

* 보조기기지원(급여) 건수 추이: (2014)12만 4,447 → (2015)13만 4,607 → (2016)19만 2,915

- 장애인의 보조기기 욕구에 비해 지원 품목, 예산 등이 제한되어 있어 충분성에 한계를 가짐(보조기기고부사업 욕구 대비 지급률 0.97%).

〈표 3-7〉 보조기기 및 접근권 지원 사업군 지원 건수

사업명		지원(급여) 건수		
		'14	'15	'16
장애인보조기기고부사업		6,810	6,036	5,689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	건강보험	74,268	83,077	131,738
	의료급여	25,597	25,026	34,152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6,848	7,990	7,020
정보통신보조기기고급사업		4,053	4,090	4,071
보조기기센터사례관리사업		6,871	8,388	10,245
합계		124,447	134,607	192,915

자료: 사업별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관련 평가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각주 11 참조).

□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

- 접근권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과 급여의 충분성이 담보되고 있음.

□ 급여의 충분성

- 장애인 보조기기(보장구) 수급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협소한 지원품목, 낮은 기준금액 등 충분성은 낮은 수준
 - 장애유형별 품목 확대 및 보조기구(보장구) 구입·유지비를 고려한 적정 기준금액 마련 필요
 - * 보조기기 교부(지체, 뇌병변 등 5개 유형), 보장구 지원(시·청각, 언어 등 15개 유형) 등
 - ** 보조기구 미구입 이유: '경제적 비용부담' 68.1%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접근권지원 사업 전반적에서 서비스수급의 적정성과 급여의 충분성은 담보되고 있으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지원사업 중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서비스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 서비스 신청 시 차량 부족 등으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거절 비율은 약 40%에 달함.
 - ** 향후 장애등급제 개편, 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고려, 적정 보급대수 기준 마련 필요

라. 성과

□ 성과 달성 여부

- 보조기기지원사업은 세부 사업별 목표에 맞게 충실히 수행되고 있으며 매년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 그러나 교부사업, 보조기기지원센터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사업처럼 계획된 예산하에서 성과를 내는 사업의 경우 예산 범위에서만 보수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있어 장애인 욕구에 부응한 목표 설정이 필요함.

-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의 2016년 예산 대비 집행률은 84% 수준이며, 정보통신보조기기사업 목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4,000건으로 확대 없이 동일하게 목표를 설정하였음.

○ 전체 보조기지원사업에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은 급여 기준 및 범위 확대 등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여 성과를 높이고 있음.

- 그러나 단순 지급 건수 및 지급액 증가만으로 성과 달성을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사업의 환류 체계

○ 보조기기 지급 건수와 예산 투입 이외 별도의 보조기기 성과지표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사업 목표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보조공학기지원사업(노동부)의 경우 2016년부터 단순화된 성과지표에서 고용 유지 실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지표(고용 유지 기간 및 만족도)를 개선하였음.

○ 접근권지원사업도 세부 사업별로 충실히 수행돼 매년 성과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사업별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및 어려움을 개선하자고 노력하는 의지도 엿보임.
 -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의 경우 장애인용 TV 수신기 사용 시 불편 사항을 점검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높였음(화면 크기 확대, 전용 리모컨 제공, 시각장애인용 전원 스위치 제공, 음성 안내 전면적 실시).
 - 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사업의 경우 이용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중계 모바일 앱 인증 방법을 개선(이메일 인증 → SNS 인증)하고, 수신자의 통화 거부를 방지하는 등 통신중계 서비스 특수번호 107에 대한 레터링 서비스를 구축하여 수신율을 높이는 등 소비자의 문제 해결을 통해 해당 사업의 성과를 확대.

〈표 3-8〉 접근권지원사업 성과지표 및 달성률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A)	실적(B)	달성률(B/A)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사업(16년)	저상버스 보급률	22.4%	22.8%	101.8%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102.4%	102.4%	100%
장애인운전교육장 입학 및 순회교육사업(15년)	장애인운전면허 합격률	91%	92.6%	101.8%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사업(15년)	장애인 보조견 분양 두수	19두	21두	110.5%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16년)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률	6,000대	6,124대	102.1%
	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 보급률	6,000대	6,123대	102.1%
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사업(16년)	통신중계 달성률	710,000건	728,561건	102.6%

자료: 사업별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관련 평가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각주 11 참조).

□ 하지만 성과 목표 자체가 서비스 공급자인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성과 목표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서비스 소비자인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 반영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소비자 중심의 성과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 거절율과 같은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거절율 2016년 40%, 2017년 30%

－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사업의 경우도 단순히 성과지표로 장애인 보조견 분양 두수가 아니라 신청자, 대기자 수를 반영한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접근권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류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설계-투입-산출-성과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교통약자이동편의사업의 경우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근거로 5년 주기로 사업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가 제한적이거나 시행되고 있음.

제3절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

1. 세부 사업군 현황

□ 목표

- 문화향유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자원 부족 문제와 제약 문제(경제적, 신체적, 지적, 사회적)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양극화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궁극적으로는 문화소외계층 없이 모든 국민들의 문화향유권과 여가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주요 사업

-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어르신문화프로그램,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총 6개 사업, 1,640억 원 규모.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여가생활지원은 문화소외지역,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장애인, 경제적 소외계층 등 다양한 대상과 지역으로 접근함.
 - 문화소외지역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작은도서관지원사업.
 -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문화향유지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
 -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 경제적 소외계층 문화향유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표 3-9〉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 분야 세부 내용 개요

사업명		대상	내용	'16년 예산 (백만 원) ¹⁾	소관 부처
문화 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문화 소외계층	•문화소외지역의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 제공	20,000	문화체육 관광부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문화 취약지역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지원	35,045	문화체육 관광부
어르신문화프로그램		60세 이상 어르신	•전국 문화시설에서 고령층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	4,677	문화체육 관광부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대한노인회	60세 이상 노인 및 전문 퇴직자	•대한노인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서 노인자원봉사단(클럽) 조직 및 관련 행사 개최 등 사업 지원	4,299 (대한노인회)	보건 복지부
	한국노인종합복 지관협회			606 (한국노인종합 복지관협회)	
문화 격차 해소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발급	78,520	문화체육 관광부
유·청소년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취약계층 유청소년 (만 5 ~18세)	•소외계층 유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의 참여 기회 제공 •대상자 1인당 매월 1회 최대 7만 원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8,678	문화체육 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장애인, 비장애인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향수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 교류 및 국제교류지원	2,250	문화체육 관광부

주: 2016년 사업 예산은 예산액 기준으로 당해 연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함.

자료: 사업별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관련 평가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¹⁴⁾

14) 사업별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음.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문화체육부 내부 자료.
- 작은도서관조성지원사업: 문화체육부 내부 자료.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문화체육부 내부 자료.
-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
-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
-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

2. 단계별 평가 세부 결과

가. 설계

□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 국민들의 문화향유 및 여가생활을 위한 권리는 누구든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에 대한 정책적 지원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¹⁵⁾
- 문화여가사업에서의 취약계층은 연간 순수예술 관람 경험이 없거나 적은 ‘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설정, 이 외에 경제적 소외계층, 지리적 소외계층, 사회적 소외계층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을 사업 대상으로 함.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경제적 소외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사업 대상으로 함.
 - 작은도서관조성지원사업은 읍·면·동·도서(섬)·산간벽지, 공단지역 등 지리적 소외 계층을 사업 대상으로 함.
 - 어르신문화프로그램과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은 노인,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근보장사업과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은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사업 대상으로 함.
- 특히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전문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아마추어 동호회 참가자 등 사업 대상이 다양. 교류 사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상호 관계를 고려하고 있음

15) 국민의 문화향유 및 여가생활의 권리와 관련한 법적 근거.

- 헌법 제11조 1항: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표적화 정도

- 문화취약지역을 제외하고 어르신, 장애인,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하는 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범위가 명확함.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은 수혜자의 문화여가 욕구를 선정의 주요 요인으로 반영하고, 선정 이후에도 순회 대상처의 수요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됨.
 - 어르신문화프로그램사업은 공모 사업 진행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문화여가 욕구에 따른 대상자 선정보다는 신청에 입각한 모집을 하고 있음
 -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자원봉사 활동(자)을 표적화하고 있으며, 단순 노력봉사활동보다는 전문 혹은 준전문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표적화된 사업으로 평가됨.
- 대부분의 사업이 해당 대상자들의 신청 또는 지원 공모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정한 기준이나 절차를 통해 선정하게 됨.
 - 다만, 작은도서관조성지원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나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의 수요 조사나 요구를 반영한 표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대상자의 문화여가 욕구 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카드 이용 대금을 지원하는 등 대상자의 욕구 수준에 대응하는 서비스 수급 설계가 필요함.
 - 장애인문화향수사업은 지원 사업을 위한 심의 기준과 가중치를 적용하여 선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그 기준에는 사업 진행의 충실성과 타당성, 수행 역량 등의 기준만 포함되어 문화여가 욕구의 다양성 반영은 미흡함.

□ 사업 간 관계

- 문화여가사업의 지역별 또는 대상별 접근을 통한 지원은 중복성의 문제보다는 사각지대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문화적 소외계층은 경제적, 신체적, 지리적, 사회적인 제약 조건을 포괄

적으로 고려할 때 여가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중년 남성,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 대상 사업 내에서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재능나눔지원사업, 노인전문자원봉사지원사업 이외에 중앙정부의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인 대상 사회참여지원사업들이 수행됨.¹⁶⁾

- 특히 노인 자원봉사클럽 참여 선정 과정에서 중복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음.

□ 모니터링의 체계성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여가사업의 대부분은 모니터링 방식과 과정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단, 대한노인회 주관의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간담회와 성과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 이외에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과정이 부재함.

- 사업 성과 보고서는 매년 작성되지만,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나 사업 수행에 대한 과정 평가,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개별 사업 건수 등의 산술적인 활동 실적을 중심으로 제시됨.

나. 투입

□ 자원 투입의 충분성 및 사업 예산의 적절성

-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의 예산은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16)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인사혁신처의 상록자원봉사단, 교육부의 한국교육삼락회(마을학습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경기도의 실버전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등.

〈표 3-10〉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 분야 연도별 사업 예산 현황

구분		예산(백만 원)		
		2014년	2015년	2016년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10,000	10,000 (추경 20,000)	20,000
	작은도서관조성지원사업	2,000	2,000	1,720
어르신문화프로그램		4,053	3,850	4,677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지원사업	대한노인회	4,376	4,376	4,299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617	617	606
문화 격차 해소(통합문화이용권사업)		73,189	96,754	78,520
유·청소년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10,970	12,176	18,678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		2,550	2,550	2,250

주: 국비지원 예산만 포함함.

자료: 사업별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각주 14 참조).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은 예산 심의를 통해 회당 지원금(약 500만 원)이 일괄 적용되어, 새로운 지급 기준 수립과 지급 기준의 객관성이 요구됨.
 - 2016년에는 총 18개의 세부 사업 유형에 226개 예술단체가 참여, 3,299회의 공연을 추진하였음. 1회 사업 추진 시 평균 수혜 인원은 228명, 평균 예산은 583만 원.
- 작은도서관조성지원사업은 도서관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요구되지만, 최근 축소되고 있음.
 - 예산 운영에서 인건비(약 50%), 도서 구입비 지출(약 20%)과 비교해 운영비 지출 비중(약 30%)이 높음
-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85~90% 수준으로 양호함. 프로그램 운영에서 교육 강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은 2016년에 예산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수행 기관 수와 참여 노인 수, 노인전문자원봉사프로그램 사업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에는 노인전문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질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2015년과 2016년에는 양적 확대로 수행 기관당, 참여 노인 봉사자 1인당 사업비의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임.

〈표 3-11〉 노인전문자원봉사지원사업의 수행 기관 및 참여 노인 대비 사업비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수행 기관 수(개)	40	183	109
참여 노인 수(명)	779	3,332	3,559
노인전문자원봉사프로그램 사업비 (백만 원)	307	340.3	416.2
총사업비 (백만 원)	617	617	606

자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2014, 2015,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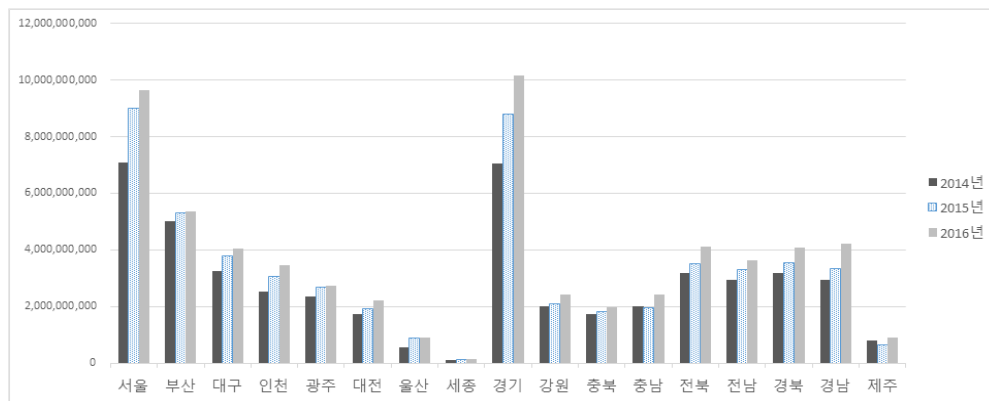
-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신청 인원의 일부(약 60%)만 수혜자로 선발되므로 예산 확대가 필요함. 또한 최대 수혜 기간이 2년으로 한정(권고)되어 있어서 다양한 스포츠 강좌를 수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은 지원 예산의 규모에 따라 선정 대상인 장애인 예술가나 예술단체 등의 선정 규모가 결정되며, 이는 전체 사업 수혜자의 규모와도 연관됨. 특히 지속 사업 이외 기획 사업 형태의 신규 사업 여부에 따라 사업 예산이 조정됨.

□ 지역적 자원투입의 적절성

- 대부분의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심지어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한 2개 사업(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의 경우에 비수도권의 신청률 자체가 저조하거나 시설 집약이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지방 문화소외현상 지속
- *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등) 설치율 : 서울 ('12)230개소→('16)356개소, 충북 ('12)105개소→('16)126개로 증가하여 각 11.5%와 4.7%의 증가율을 보임

-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의 경우, 수도권과 지역의 장애인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신청한 건수나 신청한 액수와 비교해 볼 때 수도권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음.
- 취약계층의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의 목표가 문화적 소외계층과 지역에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적 자원투입의 적절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에서 소진된 이용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르게 증가하여 지역별 인프라 격차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

[그림 3-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역별 이용액 현황



자료: 정무성 등. (2017). p.50

다. 산출

□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

○ 취약계층의 문화여가생활지원 사업의 대상자 설정은 매우 포괄적이고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지만 실제 서비스 수급 대상자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임.

- 저소득층의 문화격차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수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 ('14) 44.0 → ('15) 76.0 → ('16) 61.0

**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 ('14) 55.7 → ('15) 56.9 → ('16) 71.9

- 사회적·지리적 취약계층 대상 사업 수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 농산어촌 문화순회 사업('16) : 신청(254건) 대비 선정(36건) 비율은 7.1% 수준
- ** 문화사각지대 발굴프로그램('16) 신청(82건) 대비 선정(2건) 비율은 2.3% 수준
- 이는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격차 해소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중한 결과로 보임.
- 서비스 수급률은 개별 사업별로 다르나, 서비스 대상자 대비 추정정보는 사업 신청대비 선정비율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음
 - 예를들어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순회사업 신청대비 선정건수는 평균 10% 수준, 장애인 문화향수지원사업의 신청대비 선정건수는 43% 수준임.
 - 그러나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은 수급대상자가 포괄적이고 표적화가 어려워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 판단이 용이하지 않음

□ 사업만족도

-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매년 사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결과를 사업 결과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음.
- 대부분 사업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며, 특히 작은도서관조성지원사업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실시함.
 - 대한노인회에서 실시한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2016년에만 사업 만족도 조사를 함.
-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사업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 결과는 각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에서 전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가 다음 연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제시하기보다는 매년 실시된 만족도 점수 결과를 제시하는 수준임.

□ 사업의 효율성

-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모니터링 과정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협의나 연계는 매우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 부분에서는 사업별로 미미한 실적을 나타냄.
 - 특히 같은 대상별로 접근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기관 간의 연계나 협력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의 경우 대한노인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간 협력 등의 실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성과

□ 성과 달성 여부

- 문화취약계층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접근성 제고에 기여
 - 다만, 지역별·소득수준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대도시 ('14) 75.3 → ('16) 71.2, 중소도시 ('14) 73.0 → ('16) 81.0, 읍면지역 ('14) 57.7 → ('16) 65.7
 - ** 저소득가구(월 소득 100만원 미만) 문화예술 관람률(%) : ('14)26.6 → ('16)30.9
- 모든 사업에서 사업 목표는 달성 또는 초과 달성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 사업의 성과 목표치 설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성과목표 설정 시 수혜자 만족도 점수는 매년 상향 조정하고 있으나, 수혜 인원과 프로그램 수는 2016년에 하향 조정하여 성과 목표치 설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

□ 평가의 환류

- 모니터링 과정,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연구, 국정감사 결과 등을 통해 사업 평가에 대한 환류 과정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임.

제 4 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자립여건지원

제2절 보조기기 및 접근권지원

제3절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

제1절 자립여건지원

1. 설계

□ 대상자의 포괄성 강화

- 자립여건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은 본 사업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최대한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자립여건지원사업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대상자의 포괄성을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향후 대상자의 포괄성 강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별도의 인정조사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신청 자격 기준으로 설계할 필요가 없음에도, 장애 등급 3급까지만 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음.
 - 4급 이하의 장애인 중에서도 본 제도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본 제도에 대한 신청 자격으로 장애 등급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2019년부터 실시되는 장애등급제 개편과 맞물려 일차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의 장애 등급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의 경우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못하여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 배제 혹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센터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정립될 필요가 있음.
 - 중앙발달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전체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포괄해서 설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역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만 설치되어 있고 장애아동지원센터가 1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장애아동이 본 센터의 사업으로 포함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함.

- 현재 본 센터의 사업 구성 또한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 장애 영역을 포괄하는 장애아동에 관한 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향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대상자의 표적화 강화

○ 자립여건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욕구가 좀 더 강한 집단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자립여건지원사업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대상자의 표적화를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으나, 다만 몇 가지 사업의 경우 향후 대상자의 표적화 강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비용지원 및 성년후견선임비용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만 정해 두었을 뿐 우선지원 대상자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대상자의 표적화 정도가 낮음.

- 따라서 향후 일차적으로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에서 상대적으로 권리 침해가 높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부모 등 가족의 방문이 거의 없거나 또는 가족이 오히려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상자, 지역사회에서 부모 없이 생활하거나 부모 또는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장애인의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 우선적인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표적화를 높여서 본 사업에 대한 욕구가 높은 영유아기 발달장애 부모 또는 노년기 발달장애 가족에 대해 일차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상자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경감

○ 자립여건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의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사

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대상자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을 경감시키는 제도 개선은 비단 본 자립여건지원사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장애등급제 개편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전달체계 개편)이 진행 중임.
- 따라서 본 사업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달체계의 체감도를 높임으로써 대상자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부터 제안코자 함.

○ 현재 공공과 민간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는 전달체계의 지역적 단위가 매우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조직적으로 연계해 주는 새로운 조직을 최소한 시·군·구 단위에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전국 18개 시·군·구에서 이와 관련된 3차 시범사업이 공단-시·군·구 협업모형과 읍면동-시·군·구 협업모형 2가지 모형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본 사업이 실시되어 장애 등급이 현재 6등급 체계에서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됨.
 - 이와 같은 등급제 개편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은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최대한 대상자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임.
 - 이를 위해 현재처럼 대부분의 서비스 대상자를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은 공급자가 선발하는 구조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서비스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제공 기관에 연결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
 - 서비스 정보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서비스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여 서비스 수급에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체계가 개편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은 전달체계 설치의 지역적 단위임.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기관, 보조기기센터 등과 같은 기관들의 지역적 단위는 시도인 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지역적 단위는 읍면동임.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전달체계의 지역적 범위는 대부분 시군구임.

- 따라서 향후 장애등급제 개편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시 최소한 시군구 단위에 가칭 ‘맞춤형 장애인 서비스 지원팀’과 같은 조직을 신설하여 읍면동-시군구-시도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조직의 체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고려 없이 법령에 의해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다만, 만 65세가 돼서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만 65세 이후에 장애 등록을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사업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구조임.
- 따라서 대상자의 사각지대를 경감시키기 위해 두 제도 간 급여량 차이에 대한 연계 방안 마련, 두 제도의 선택권 등 다양한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앙발달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공공후견인 추천, 권리침해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지원사업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사업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측면이 강해 향후 이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권익옹호기관이 거의 설치되고 있음. 이와 같은 비효율의 문제는 중앙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발생이 예견되므로 향후 양자 간의 역할 정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중앙발달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15개 장애 유형 중 발달장애에 특화된 전달체계인 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5개 전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전달체계이기 때문에 역할 및 업무가 다를 수 있음.
- 하지만 현실적으로 권리 침해 및 권리 구제가 가장 요청되는 집단 또한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기관의 대상자가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따라서 향후 두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및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법률 개정까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장애등급제 개편과 무관하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경우 지난 2016년 유사 중복사업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으나, 향후 원래 센터의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다시 여성가족부로 소속을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경우 본래 취지가 여성 장애인 교육이란 국한된 목적이 아닌 여성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자립 지원, 사회 참여, 자조모임 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특화된 전달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중복에 해당되어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매우 축소되었음.
- 단, 여성가족부로 소속을 이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지적 관점이 요청됨.
 - 즉 여성가족부의 경우도 장애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장애 여성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입안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중심의 성과지표 체계 구축

○ 자립여건 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의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성과를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하지만 현재 자립여건지원사업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성과지표 및 목표치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일차적으로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성과지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도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비용지원 및 성년후견선임비용지원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로서 후견심판비용지원 건수, 공공후견인활동지원 건수,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성과지표보다는

산출지표에 가까움.

- 따라서 최소한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는 본 사업을 통한 삶의 긍정적 변화 등을 조사하여 본 사업의 성과를 진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성과평가를 위한 실적 관리 및 지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자립여건 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설계-투입-산출-성과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내실화 및 질 제고를 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자립여건 지원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한 평가·환류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향후 자립여건 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2. 투입

□ 자원 투입의 충분성 확보

- 자립여건사업에 포함된 사업의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충분한 자원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지원 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 및 인적자원 투입이 충분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연차별 활동보조인 급여 인상에 따라 예산은 증액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가 제공받는 활동지원급여는 거의 오르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서비스 단가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내년도 활동 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서비스 단가 인상과 함께 급여 인상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받는 센터 개소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14년 56곳, 15년 61곳, 16년 62곳), 지원받는 예산 규모도 1억 5,000만원으로 거의 동결 수준임.
- 향후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지원 규모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사업의 경우 현재 전국에서 22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 증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5년에는 예산이 감소하였음.
- 이로 인해 본 센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임. 따라서 향후 본 센터의 고유사업과 목적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원 투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중앙발달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사업 대상이 전국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 내용도 연구, 프로그램 개발부터 정보 제공 및 통합적 서비스 지원, 후견, 권리구제 등으로 매우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게 현실임.
- 따라서 해당 센터가 고유사업과 목적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원 투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 단, 자원 투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용 대상자의 형평성 제고 및 사각지대 발생 방지 등 자원 투입의 효율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임.

□ 자원 투입의 적절성 확보

- 자립여건 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은 총예산 대비 실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절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는 주로 기관 지원 중심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원 투입의 적절성이 확보되려면 일차적으로 자원 투입의 충분성이 일정 수준 담보되어야 할 것임.
- 즉 기관에 투입되는 자원이 어느 정도는 충분해야 그 안에서 사업비가 일

정 부분 담보될 수 있음.

- 자원 투입이 충분하지 않다면 대부분의 예산은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현재 자립여건 지원에 포함된 기관지원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사업, 중앙발달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3개 사업이 있는데 자립생활지원사업은 사업비가 전체의 20%,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16년 기준으로 12%에 불과하여 자원 투입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음.
- 특히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는 예산 감소로 인해 더욱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향후 자원 투입의 충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의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임.

3. 산출

□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 확보

- 자립여건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은 서비스 수요 대비 수급률이 적정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서비스 수요 측정 자체가 어려워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욕구는 늘 존재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들의 예산이 일정 부분 증액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산의 소폭 증가, 변동 없음 또는 감소 상태여서 서비스 수요 대비 적정한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 특히 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금 산정 기준을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애인의 서비스 급여량 확대를 전제로 최중증와상장애인 또는 도

전적 행동이 강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심야 및 공휴일 서비스 이용 시 차등 수가를 확대 적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급여의 충분성 보장

○ 자립여건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은 서비스 수요 대비 급여 수준이 충분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립여건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자립여건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해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급여의 충분성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일차적으로 지역사회 중증장애인, 여성 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같은 다중 차별적 집단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의 증액은 필수적임.
- 보다 욕구가 강한 집단을 표적화하여 이들에게 일차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함. 이를 위해서 대상자의 표적화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4. 성과

□ 성과 달성 및 성과 달성을 위한 대안 마련

○ 자립여건지원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 주체와 제공 인력은 충분히 사업을 수행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판단됨.

- 하지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및 중앙발달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부재하여 성과를 달성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움.
- 그뿐만 아니라 현재 성과지표가 제시된 사업들의 경우도 대부분 이용률 또

는 만족도로서 가장 낮은 수준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향후 소비자 중심의 성과지표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개별 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별 사업들의 성과 달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때 성년후견심판비용지원 및 성년후견선임비용지원사업의 경우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사업 대신 후견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직원 양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일반 시민들이 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되더라도 그들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공공후견으로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 따라서 대안으로 후견법인의 전문직원이 직접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민공공후견인을 활용하면 양질의 후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임.

제2절 보조기기 및 접근권 지원

1. 보조기기 지원

가. 설계

□ 사업 필요성 및 목적의 명확성 강화

- 장애인의 기능 개선, 고용 안정, 정보 격차 해소 및 자립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조기기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각자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목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 *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건강과 의료적 관점의 지원사업),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저소득층지원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고용촉진지원사업), 보조기기센터 사례관리사업(사후관리사업)

□ 대상자의 포괄성 강화

-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과 달리 사업 목적에 따라 소득분위(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혹은 취업 여부(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대상자의 포괄성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세부 사업별로 장애 유형별 지원 가능한 보조기기의 종류가 편중되어 있거나 다양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대상자의 포괄성에 한계를 보여 주고 있음.
 - 전체 보조기기 사업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지체, 뇌병변 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보조기기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모든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장애 유형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별로 품목의 종류를 다양화하여야 함.
 - 특히 교부사업의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된 편향된 소득계층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일상생활 보조기기 욕구가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인 서비스로의 개편이 필요함.

□ 사업 간 정합성 제고

- 보조기가지원사업들은 여러 사업이 파편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현재의 공급자 중심 사업에서 서비스의 편리성이 담보된 욕구 기반의 수요자 중심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평가 대상 사업 이외 국가보훈처 보철구지원사업(국가유공자), 고용노동부 재활보조기가지원사업(산재장애인), 교육부 학습보조기가지원사업(특수교

육 대상자) 등 각 부처에 따라 각기 다른 신청 절차와 지급 체계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신청 접근성 저하 및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심지어 복수의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각기 분절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고 있어 규정의 혼선과 지원 정책의 중복, 비효율, 사각지대, 중복 지원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보조기기 전달체계의 현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안)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안코자 함.

○ 보조기기 사업별로 전달체계의 분산(읍면동 지자체 활용, 각 공단 지사활용 등)으로 이용자가 보조기기 신청 시 접근성의 문제와 사후 관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통합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이 필요함.

– 현재 분절되어 있는 사업에 따라 지원 품목과 지원 대상이 상이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은 통합전달체계를 통해 기능과 욕구에 맞는 보조기기를 선택하고 제공,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현재는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행정 부서에 의한 전달체계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욕구 기반의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실제 지원 절차 중에 영리적 목적의 업체 등에 의해 보조기기가 결정되어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예산의 비효율성과 낮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 사후 관리가 미흡·낭비되고 있음.

○ 국가권익위원회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리체계 개선(2017)’에 따르면 보조기기센터가 부재한 시도의 경우 지원 보조기기 미사용, 방치, 품목 분류 및 관리체계 미비 등 보조기기 지원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전문적인 교부를 위해 보조기기센터를 활용한 전달체계를 주문. 미 설치 지역에 대한 조속한 설치를 권고한 바 있음.

– 즉 보조기기 교부 지연, 보조기기 안내 미비, 적합성 평가 미흡으로 부적합

품목 교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기기센터 설치 및 이를 활용한 보조기기 교부사업 활성화를 주문한 바 있음.

－ 교부 절차 간소화, 신청의 접근성, 교부의 체계성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한 전달체계로의 통합이 요구됨.

- 일례로 의료급여의 보장구지원사업은 건강보험의 체계를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전산 시스템 및 재원이 다르므로 행정체계와 대상자(수급자)가 유사한 교부사업과 통합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단기적인 통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례로 보임.

○ 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범사업에서도 적격 여부와 자격 기준은 연금공단·시군구에서 심사하고,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판단은 보조기기센터를 활용하여 장애인 욕구와 사용 환경 등을 종합하여 최적의 보조기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현재 광역 단위에 설치된 보조기기센터를 접근성 차원에서 보다 낮은 단계의 지역 단위별 센터를 확대 설치하거나 보조기기센터 책임하에 거점기관(복지관 등)을 지정하여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됨.

－ 보조기기센터에서는 각 부처 사업 목적에 맞는 보조기기를 신청하며, 그에 따른 사후 관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보조기기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됨.

○ 현재 대부분의 사업은 1인 1품목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공적 급여 지원 품목의 종류(건보 85개, 교부 28)에 묶여 있음. 보조기기 수요와 욕구가 제도에 묶여 있는 상황으로 품목 종류에 따라 지원하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급여 총량제 형태(예: 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지원사업; 1년 160만 원 한도 내 대여 및 구입 가능)로 제도를 변경하여 급여액 내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보조기기센터를 통한 평가를 통해 보조기기 신청과 급여를 진행한다면 무분별한 신청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의 경우 비급여 품목이라도 경기도 재활공학센터를 통한 기능과 욕구 평가 이후 지원 금액 내에서 다양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지원 사업에 따라 정해진 품목이 아닌 기능과 욕구에 기반한 품목을 제공하는 지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존 공적 급여 사업 이외 바우처사업을 활용하여 재활 바우처 내 보조기기 구입을 추가한다면 수요자가 바우처 제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여 기존 고착화된 급여 품목의 범위를 뛰어넘어 다양한 보조기기를 장애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에 맞는 지원 품목 조정

○ 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의 85개 품목 중 의료적 성격이 강한 63개의 의지보조기 품목을 제외하면 일상생활 기반의 품목은 일부 품목으로, 생애주기와 활동 영역에 따라 다양한 보조기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강’이란 급여 목적을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여 일상생활 기반의 품목을 추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에서 일상생활 기반 품목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복지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조기기지원은 조세 재원에 기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며, 복지사회를 위한 정부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조세 재원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장성 확대라는 명목하에 사회보험 성격의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의 품목을 확대하여 다양한 보조기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모니터링의 체계성 강화: 지급된 보조기기 사후 관리 체계 강화

○ 보조기기 지급이 결정된 이후 개인 활동을 위해 개조나 수리, 사용 훈련, 사용 적합성 평가와 같은 최적화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

요가 있음. 단순히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제공된 보조기기의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미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급여 지급 이후 사후 관리는 전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몫으로 여겨졌으나, 지원 주체의 책무성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사후 관리를 위해서 현재 확충하고 있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수리 및 개조, 훈련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복지부 차원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교부사업의 통합적 사후 관리 체계 운영 필요).

나. 투입

□ 자원 투입의 충분성 확보

- 각각의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최근 3년간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정채되어 있어 장애인의 욕구에 비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획 예산(PPBS) 증액이 필요한 상황임.
-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도 ‘보청기’ 기준 금액의 상향으로 인한 예산의 증가로 ‘보청기’ 부분을 제외할 경우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 또한 정채되어 있음.

□ 자원 투입의 적절성 확보

- 전체 사업 규모 대비 단위 사업별 예산 투입의 비율(2016년 기준)을 보면 교부사업 1%, 건강보험 74%, 의료급여 19%, 작업용보조공학기기 4%, 정보통신 1%로 사업별 예산의 규모가 비대칭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어 사업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기기의 품목과 대상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업별 예산 규모의 비대칭성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통하여 서비스 품목과 대상의 균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간 자원 투입의 균형성 확보

- 보조기기센터사례관리사업은 보조기기 사례 관리 및 품질 관리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현재 7개 지역(서울, 울산, 경북, 전남, 충남, 강원, 세종)이 미설치되어 지역 간 서비스의 균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보조기기센터사례관리사업의 경우 광역센터가 일괄적으로 2억 원씩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등록 장애인이 51만 2,000명인 경기도와 3만 3,000명인 제주도가 동일한 예산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 지역 간 서비스 제공량의 불균형과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지역 규모에 맞는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더불어 지역 인구 및 규모에 따라 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함.

□ 장애 유형별 자원 투입의 균형성 보완

- 장애 유형별 보조기기지원 비율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의 경우 대부분 2015년 기준 지체·뇌병변장애가 전체 급여액 중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보청기 기준 금액 상향으로 청각장애가 전체 급여액 중 61%를 차지하는 등 특정 장애에 보조기기지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 장애 유형에 따른 지원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별 보조기기를 발굴하여 지원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에서 시각장애의 급여액은 1.76%,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에서 시각장애 보급 품목은 22.7%, 정보통신보조기기지원사업에서 시각장애의 보급 비율은 26.2% 등으로 시각장애에 대한 지원 규모가 등록 장애인 비율에 비해 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음. 더불어 지적, 자폐, 언어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도 미미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 산출

□ 급여의 충분성 보장

- 사업의 산출 근거로 잡고 있는 총지원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일부 품목의 확대에 따라 특정 사업에서 상승이 전체 건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별 사업들은 3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 특히 개별 사업의 예산 변화에 따라 지원 건수가 연동되어 있어 지원 품목과 지원 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급 건수와 지원 금액 등의 양적 지표만을 활용하고 있어 보조기기 지원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에 따라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지원 품목 확대

- 보건복지부 품목 고시에 의해 분류되는 보조기기는 460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평가 대상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224개 품목으로 매우 협소한 수준임. 이 중 중복된 품목을 제외할 경우 실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기 품목은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미흡한 수준임.
 -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 85개 품목, 장애인교부사업 28개 품목, 정보통신보조기기지원사업 84개 품목,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33개 품목으로 지원 품목 협소.
- 사업 중 급여 규모가 가장 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경우 주로 건강과 의료적 관점의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음.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일상생활 자립 측면의 복지적 권리 차원까지 확대하여 일부 일상생활 보조기기를 지급할 필요 있음. 소득 중심이 아닌 자립 중심으로 사업 목적을 변경하여 지원 대상과 품목을 확대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임.

□ 기준 금액 확대

○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과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의 경우 지원 품목의 지원 기준액이 수년간 시장가격에 따른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과도한 자부담이 발생하여 보조기기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기능이 만족스럽지 못한 품목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보장구지원 기준액은 2005년 기준액 산정 이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되지 않고 있어 기능과 소재 등의 다양화로 상승된 제품 단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전동휠체어의 경우 장애인보장구지원 품목으로 등록된 제품 중 지원 기준액인 209만 원이 넘는 제품이 전체 34개 중 25개(73%)이며, 평균 가격이 352만 원으로 지원 품목을 구입할 경우 구입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이 본인부담금으로 돌아와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는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의 경우에도 시장에서의 고수요 제품에 비해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지원 금액이 낮아 고수요 제품을 구입하기 위한 자부담이 발생함. 이로 인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인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보급 취지가 희석되고 있음.

- 특히 ‘진동시계’, ‘녹음 및 재생장치’, ‘음향신호기 리모컨’의 지원 금액으로는 현재 유통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없어 결국 해당 품목이 필요한 장애인은 자부담을 통해서만 구입해야 하는 상황임.

○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기능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직된 품목 확대 정책 때문에 다양한 욕구 기반의 품목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품목 확대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며, 지원 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가의 고기능 사양의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공학사 등 전문가의 심층 평가에 따라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발이 필요함.

라. 성과

□ 성과 달성 및 성과 달성을 위한 대안 마련

- 각 사업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목표에 맞게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단순 지원 건수와 투입 예산의 정량 지표만을 성과 측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 지원 사업에 맞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성과 측정을 단순히 공급자 중심의 성과지표에서 사용자 중심의 성과지표로 다양화하고 사업 평가를 위한 개별 지표 개발 및 평가 정례화, 사업 수혜 대상 장애인 욕구 조사 및 사업 만족도 조사 등 사후 관리 제도의 강화를 통해 질적 개선을 유도할 필요 있음.
- 최근 제정된 보조기기법에 따른 지원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의 규모 등이 대부분 사업에서 예산 증액 없이 동결 또는 삭감되는 상황에서 성과 달성의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욕구에 맞는 지원 사업의 성과 달성이 가능하도록 사업 예산의 확대가 필요함.

2. 접근권 지원

가. 설계

□ 대상자의 포괄성 강화

- 접근권 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이 본 사업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최대한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우선 접근권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디자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만을 위한 사업으로 인식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균형발전계획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접근권지원사업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대상자의 포괄성을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으나, 다만 몇 가지 사업의 경우 향후 대상자의 포괄성 강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선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사업,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소외계층통신접근권 보장사업,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대상자가 포괄적인 측면이 있음.¹⁷⁾
- 물론 경증장애인의 경우도 본 사업에 대한 욕구 및 필요도를 가지고 있다면 포괄성 측면에서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향후 대상자의 포괄성을 강화하되 이와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표적화를 함께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사업의 경우 시내버스 이외에 향후 시외 및 고속버스까지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대상자의 표적화 강화

- 접근권 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욕구가 좀 더 강한 집단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접근권지원사업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상자의 포괄성을 다소 확대 적용해 대상자의 표적화 강도가 다소 약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대상자의 표적화 강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향후 장애등급제 개편 사업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중증과 경증만 존재하게 되는데, 접근권 지원에 포함된 사업들 중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사업,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사업,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사업의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임.

17) 보조견지원사업의 경우 지체장애인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점, 방송접근권보장사업은 경증시각 및 경증청각장애인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점, 통신접근권보장사업은 경증 청각 및 언어장애인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점,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사업은 경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운전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임.

- 물론 경증장애인도 본 사업에 대한 욕구와 필요도를 가질 수 있지만 제한된 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향후 본 사업들의 대상자를 중증으로만 표적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민간에서도 운영 중인데, 향후 민간에서 운영 중인 보조견양성기관은 중증시각장애인을, 정부 지원으로 운영 중인 보조견양성기관은 중증청각장애인 중심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좀 더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대상자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경감

- 접근권 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의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재 대부분의 접근권 지원에 포함되는 사업들은 대상자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 다만 몇 개 사업에서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약간 있다고 판단됨.
-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지자체에서 중복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예를 들면 현재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 ‘100원의 택시’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제공되는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대상자의 중복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따라서 향후 공급량이 어느 정도 충족된 시점에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사업의 경우 시군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수화통역센터의 전화통역서비스와 일정 부분 중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물론 수화통역센터의 경우 일차적으로 방문서비스가 핵심인 전달체계이지

만 전화통역도 중요한 서비스의 하나로 전국적으로 시행 중임.

- 따라서 향후 수화통역센터의 사업 구성에 대한 변경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물론 현재 시군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수화통역센터의 인력 배치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청각장애인의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수화통역의 욕구가 즉각 대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복적 성격이 매우 약하다고도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소비자 중심의 성과지표 체계 구축

○ 접근권 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의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성과를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일차적으로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성과지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재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을 소비자 중심으로 좀 더 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신청 건수 대비 처리 건수(또는 서비스 거절율)와 같은 형태의 목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견 보급 두수에서 성과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분양 대기자의 수 대비 분양 두수와 같은 방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 지원을 통해 보조견을 보급받은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 지도와 관련된 성과 목표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성과평가를 위한 실적 관리 및 지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접근권 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설계-투입-산출-성과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내실화 및 질 제고를 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 현재로서는 접근권 지원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한 평가환류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 현재로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사업의 경우에 한해 법정 계획을 통한 모니터링이 강제화되어 있음.
 - 따라서 향후 접근권 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 또는 법정 계획을 마련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나. 투입

□ 자원 투입의 충분성 확보

- 접근권지원사업에 포함된 사업들은 지원 대상의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 및 인적자원 투입이 충분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단, 자원 투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자원 투입의 효율성은 담보되어야 할 것임. 즉 이용 대상자의 형평성 제고 및 사각지대 발생 방지 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임.
 - 하지만 접근권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를 기반으로 투입 자원이 산출되기보다는 전년도 대비 점증적으로 예산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투입 자원이 충분하다고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특히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역 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역 간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로서는 서울 40%, 그 외 지역 50%로 획일적이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

한 지역의 경우 격차가 더 커지고 있음.

□ 자원 투입의 적절성 확보

- 접근권 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은 총예산 대비 실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절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사업 간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와 같은 경상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 다만 사업별로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함. 예를 들면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전체의 약 6%에 불과하지만 동 사업은 대부분 운전 전문강사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운전 전문강사의 인건비와 출장비는 모두 사업비 성격이 강함.
 -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따라서 향후 자원 투입의 적절성 확보를 좀 더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비적 성격이 강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사업비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사전에 편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다. 산출

□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 확보

- 접근권 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은 서비스 수요 대비 수급률이 적정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본적으로 접근권 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욕구는 늘 존재함.
 -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들의 예산이 일정 부분 증액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산의 전년도 대비 점진적 증가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비스 수요 대비 적절한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사업의 경우 중장기 검토가 필요함

–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특별교통수단을 지속 도입 중이나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016년 장애인 콜택시 거절 비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향후 일차적으로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 기준 보급 대수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재로서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정하고 있는데, 향후 장애인의 이동 수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실태 등 수요자의 이용 패턴에 대한 검토와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만 이원화되는 새로운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보급 대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기존 1~2급이 아닌 중증과 경증이기에 때문에 기존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중증으로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토부는 곧 시행될 장애등급제 개편(중증과 경증으로 이원화, 복지부)에 따라 현행 법정 보급 대수 산정 기준(1급 및 2급 등록 장애인 200명당 1대)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계획임.

○ 또한 서비스 수요를 측정할 때 사업의 특성상 장애인보조전 전문훈련기관사업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요구됨.

– 단순히 서비스 수요 대비 보조전 지원만을 서비스로 볼 것이 아니라 보조전 보급 이후 보조전에 대한 사후 지원과 보조전 은퇴 이후 새로운 보조전을 다시 보급하는 일련의 과정도 ‘서비스’에 포함시킨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급여의 충분성 보장

- 접근권 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은 서비스 수요 대비 급여 수준이 충분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하지만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접근권 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하지만 접근권 지원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해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급여의 충분성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향후 급여의 충분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급여 지원 방식의 변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애등급제 개편과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의 연장선상에서 특별교통수단이용, 운전면허교육과 같은 사업을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연장선상에서 제공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성과

□ 성과 달성 및 성과 달성을 위한 대안 마련

- 접근권 지원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 주체와 제공 인력은 충분히 사업을 수행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판단됨.
 - 하지만 현재 성과지표가 제시된 사업들의 경우도 대부분 보급률, 보급 건수, 중계 건수 등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향후 소비자 중심의 성과지표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개별 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중복적 성격이 존재하는 사업에 대한 정비,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지자체 간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의 도입, 소비자 관점에서
서의 급여 범위 확대 및 성과지표 설정, 급여 지원 방식의 변경 등이 함께 검토
되어야 할 것임.

제3절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 지원

1. 설계

□ 대상자 범위의 재설정과 포괄성 현실화

- 법적 근거나 사업의 대상적 범위는 포괄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에서 선정된 대상자는 특정 집단에 제한적으로 적용되
고 있음.
 - 특히 문화여가사업의 취약계층 범위는 경제적 소외계층뿐 아니라 문화적
소외계층으로까지 확대,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본 평가에서는 문화소외 지역,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신체적 취약계층(장애
인), 경제적 소외계층 등으로 중분류하여 세부 사업에 대해 접근하였음. 모든
국민의 문화권과 여가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약 조건과 취약 조건을 가진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소외계층 대상의 문화여가생활 지원에 집중하는 것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의 교류나 국제 교류 등을 통한 인식 제고를 위해
문화 수용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문화여가 욕구에 따른 대상자의 표적화 강화

- 취약계층의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은 포괄적인 대상자 범위에 비해 제한된 예
산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모 형식의 선정 과정을 거치면서 대
상자를 표적화함.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정한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대상자들의 문

화여가 욕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세부적으로 요구됨.

- 통합문화이용권사업과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등은 대상자의 욕구 수준에 대응하는 서비스 수급 설계가 필요함.
- 장애인문화향수사업은 문화여가 욕구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상자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경감

- 본 평가에서는 문화소외지역,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신체적 취약계층(장애인), 경제적 소외계층 등으로 중분류하여 세부 사업에 대해 접근하였음. 모든 국민의 문화권과 여가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약 조건과 취약조건을 가진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소외계층 대상의 문화여가생활지원에 집중하는 것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의 교류나 국제 교류 등을 통한 인식 제고를 위해 문화 수용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연계사업의 협조 체계 마련

- 소외계층의 대상자나 대상 지역 구분에 따라 정부 부처나 지방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존재함.
 - 특히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의 경우 대한노인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만, 각 전달체계나 협력기관과의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협의체 방식이 존재하지 않음.
- 각 대상별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에 대상자 선정 방식의 협력, 대상자의 중복문제 해결 노력, 대상자 범위의 포괄성과 배제성 고려 등 협조 내용과 방식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함.

□ 소비자 중심의 성과지표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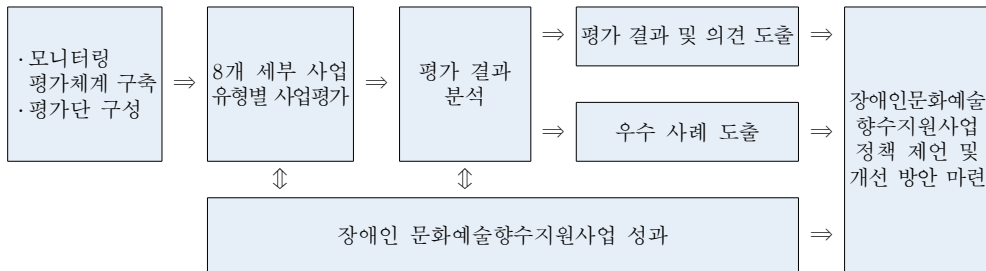
- 취약계층의 문화여가지원사업에 포함된 사업의 성과지표는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대부분의 사업이 공공 주도의 설계와 일방적인 대상자 지원 프로그램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대상자들의 문화 욕구와 여가 환경을 반영한 기획사업이 필요함.
 - 특히 이용률 관리 지표의 경우 신청자 대비 선정 비율을 통해 관리의 편리성만 고려하는 사업이 많은데, 실제 사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지표 관리가 필요함.
- 또한 현재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도 소비자 중심으로 좀 더 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산출 지표의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가 차년도 사업 설계나 투입 지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성과 보고서 자료로만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 문화여가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 만족도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여 성공한 사업의 사례 발굴이나 환류 과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 기준으로 고려해야 함.

□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대부분의 문화여가지원사업에 대해 설계-투입-산출-성과의 평가 과정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내실화 및 질 제고를 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한 평가환류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 단, 장애인 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의 경우는 현장 평가 방법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사업 추진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 결과를 적절히 환류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함.
- 현장 평가의 지표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있으며, 단계별 모니터링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도 함.

[그림 4-1] 평가 모니터링 추진 방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 투입

□ 자원 투입의 충분성 확보

- 취약계층의 문화여가지원사업에 포함된 사업들은 지원 방식이나 지원 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 투입이 충분히 확보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재 문화여가지원사업의 대상자 규모나 지원 내용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 투입이 요구되지만, 예산이 감소하거나 대상자 개인(또는 단체)의 수혜 지원금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 특히 문화여가지원이 활동지원의 형태가 많다고 볼 때 활동의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요구됨.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비중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적 자원 투입의 적절성 확보

- 취약계층의 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청 건수와 지원 결정 건수, 신청액과 지원결정액 등의 비율이 수도권과 지역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특히 사업의 성격상 문화적 소외계층과 지역에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도시 지역보다는 비수도권이나 도서 산간 지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3. 산출

□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 확보

- 취약계층의 문화여가지원사업은 서비스 수요 대비 수급률이 적정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여가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더욱이 취약계층의 문화여가서비스 수요는 증가하지만 서비스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공급을 위한 예산 확보의 다각화가 필요함.
- 서비스 수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들의 신청률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일부 사업에서는 수행 기관 참여 수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재공모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야 함.
 - 그러나 취약계층의 대상 특성에 따라서 낙인효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함.

□ 사업 만족도의 환류 방식 도입

- 대부분 문화여가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문화여가사업의 참여 결과가 가지는 특성임. 정량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수치만으로는 사업의 성과 관리나 산출 지표로 적절하지 않다고 봄.
 -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정성평가와 문제점 분석이 가능하여 이를 차년도 사업에 환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함.
- 취약계층의 문화여가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이용자나 수혜자에게만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대상자에는 해당하나 실제 수혜자가 아닌 대상자나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대상자도 비교 조사를 통해 분석하는 등 통합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함.

-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각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향후 각 개별 사업의 사업 만족도 조사에 대한 방식이나 결과뿐 아니라 다음 연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였는가에 대한 지표도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성과

□ 성과 목표의 현실화

- 모든 사업에서 사업의 목표는 달성 또는 초과 달성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 목표치 설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함.
 - 일부 사업의 경우는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인원과 프로그램 수에 대한 성과 목표치는 하향 조정하여 성과 목표 설정의 현실화가 필요함.

□ 평가체계 표준화

- 취약계층의 문화여가사업군에 포함된 개별 사업이 매우 다양하며, 각 사업 영역별로도 단위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실제 사업의 성과를 하나의 지표로 측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 그러나 취약계층의 대상자 설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평가체계는 문화여가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지표를 활용하되, 소비자 중심의 성과지표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

<향후 문화여가지원사업 평가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

-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여가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삼아 평가를 진행하였음.
- 이는 문화여가 지원이 개인의 사회적 단절과 상대적 박탈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회보장정책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지서비스와 서비스 지원 성격, 대상, 운용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향후 문화여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사업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요구됨.

참고문헌 <

<

- 강신욱, 강혜규, 노대명, 이현주, 이병재. (2015). 사회보장정책평가의 방향과 과제. 사회보장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토해양부. (2012).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12~'16).
- 국토교통부. (2016).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김성희, 이송희, 이민경, 김완효, 박경수, 변경희 등. (2011).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이행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 이송희, 김완효, 민홍기, 박경수, 박은혜 등. (201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2017) 수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복지 및 문화복지 사각지대의 정의.
- 보건복지부. (2016). 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 보건복지부. (2016). 의료급여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 양혜원. (2011). 정부-지자체 문화복지 정책사업의 개선방향: 문화바우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개원기념 심포지엄 자료집(2011년). pp.59-8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5). 여성가족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이혜승. (2011). 취약계층 문화복지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 정무성, 최상미, 양혜원, 한정원, 임유진, 전재현 등. (2014).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승실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현일, 조현성, 이현서, 김의숙, 전주람, 신희연 등. (2015). 2015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현성, 정광렬, 김희수, 이주연, 양은경, 이성겸 등. (2011). 2010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계획. 각년도(2014-2016).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실적보고서. 각년도(2014-2016).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201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계획.

고용노동부.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운영계획,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고용노동부.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평가자료.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고용노동부.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기타 자료(통계자료, 현황자료).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성과보고서.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소외계층 통신접근권보장 사업계획서.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소외계층 통신접근권보장 사업성과보고서.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소외계층 통신접근권보장 자체평가보고서.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 및 지침.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평가결과서.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실적보고서.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자체 및 외부 평가보고서.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연구.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사업계획서.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성과보고서.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자원봉사지원사업 추진실적 종합보고서.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사업계획서 및 사업 실적보고서.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 사업안내. 내부 자료.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만족도 심층조사 정량 보고서. 내부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내부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내부 자료.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장구 개요 및 통계(건강보험). 내부 자료.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장구 지급 현황(의료급여).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견훈련사업 추진실적.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사업계획서,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사업성과보고서,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고유사업평가 실적보고서.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평가 결과.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 결과.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 사회보장위원회.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6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자료집. 내부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 결과보고서.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지정운영 운영지침. 각년도(2014-2016). 내부 자료